

한일회담반대운동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한일회담반대운동 / 김기선 지음.
— 서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p. ; cm, — (역사다시읽기 ; 다섯)
ISBN 89-91057-15-2 44910 : ₩3000
ISBN 89-91057-00-4(세트)
911,073-KDC4
951,9043-DDC21 CIP2005002737

펴낸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펴낸이 | 함세웅 펴낸일 | 2005년 12월 28일
주소 | (100-785)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1~3층
소리통 | (02)3709-7500 글통 | (02)3709-7540 | <http://www.kdemocracy.or.kr>
맵시 | 도서출판 오름 (02)585-9122,3 찍은곳 | 서진인쇄
사진자료협조 | 김천길, 임재현,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경향포토, 연합포토

한일회담반대운동

| 김기선 지음 |

... ‘역사다시읽기’ 를 펴내며

역사는 과거를 빌미로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가로막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는 퇴행의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역사는 바로 오늘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무엇이며 나아가 갈 방향은 어디인지를 가늠하는 생생한 현실인식입니다. 오늘날의 삶과 사회를 직시하고 내일의 변화와 대안을 찾기 위한 항해의 나침반이자 지도입니다. 역사는 기억을 뛰어넘는 성찰이며, 지난날을 오늘의 눈으로 다시 보는 동시에 오늘을 재인식하는 진리 탐구의 망원경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의 과제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면 해방 후 우리 사회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확립과 민족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여전히 오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민주화운동 역사를 지금 이곳에 불러들이는 이유는 이같은 과정이 우리 모두의 숙제를 풀어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 ‘역사다시읽기’ 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를 깊어지고 나갈 푸릇푸릇한 젊은이들이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인식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데 나름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차례

- 1 한일회담, 그 14년의 기록 _7
 - 1. 다시 돌아보는 한일회담 _8
 - 2. 배상과 보상은 다르다 _13
 - 3. 박정희 이전의 한일회담 _20
 - 4. 청산되지 못한 과거 _25

- 2 박정희 정권의 등장 _29
 - 1. 반란의 시작 _30
 - 2. 군인들의 나라 _33
 - 3. 박정희 정권의 ‘빨갱이 사냥’ _37
 - 4. ‘혁명’의 앞과 뒤 _41

- 3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더냐? _47
 - 1.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_48
 - 2. 때는 왔다 _56
 - 3.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더냐 _62
 - 4. 박정희의 한일회담, 무엇이 문제인가 _66

- 4 시체여, 널 없는 시체여! _79
 - 1. 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 _80
 - 2. 쓰러진 학우를 들것에 메고 _83
 - 3. 불타는 6월 _88
 - 4. 계엄령과 재야세력의 등장 _93

- 5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 청산 _99
 - 1. 김중배를 누가 죽였나? _100
 - 2. 비준반대투쟁, 그리고 위수령 _106
 - 3. 글을 맺으며 _110

1

한일회담, 그 14년의 기록



1. 다시 돌아보는 한일회담

친구끼리 싸워도 화해가 필요한 법이다. 쑥스럽고 다소 구차하게 느껴지더라도 서로의 잘잘못을 가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상대에 대해 그 동안 몰랐거나 잘못 알았던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두 사람의 우정이 더욱 두터워질 수 있다. 이른바 ‘과거 청산’이다.

과거사 청산 얘기만 나오면 넋덜머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왜 자랑스럽지도 못한 과거 일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느냐, 그런다고 이미 있었던 과거가 달라지느냐,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가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며, 지울 수 없는 운명의 끈으로 미래로 가는 현재의 우리를 포박하고 있다.

자존심을 내세워 화해하지 않은 두 친구가 있다고 치자. 괴로운 건 떨어진 두 사람만이 아니다. 두 사람과 함께 친했던 다른 친구들은 예전처럼 한데 어울려 즐겁게 놀지 못하고 이 두 사람을 각각 만나야 한다. 친구들이 두 사람을 오가는 가운데 서로

의 말이 과장되거나 잘못 전해져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닫아 버리고, 친구들 또한 이 편 저 편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된다. 이제 이들은 다시는 함께 즐거웠던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한과 대립과 다툼으로 얼룩진 미래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

개인과 개인, 집안과 집안,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세상사 모든 일이 마찬가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도 결국은 '청산되지 못한 과거'에서 출발한다. 여러 해 동안 반목과 대립을 되풀이해 온 몬테규 가와 캐플렛 가는 하인들마저 서로 험담하고 싸울 정도로 원수 집안이다. 두 명문 집안의 싸움은 시민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마침내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낳게 된다.

양쪽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그래도 상처가 덜한 편이다. 국가와 개인, 강대국과 약소국의 경우처럼 어느 한쪽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내리눌리고 억압당했던 다른 한쪽의 치욕적인 경험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을 포함한 제대로 된 화해 과정 없이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가 쉽사리 아물지 않는다. 청춘을 바쳐 군사독재에 저항한 사람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감옥에 갇혔거나 해직·해고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물질적으로 보상해주며, 집단 묘역을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36년간 한국을 강제 점령한 일본과의 관계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집단 학살, 생체 실험 등 만행을 저지른 독일의 행적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면서도, 36년 동안 우리 민족의 고향을 찢내고 사지로 내몰고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한국에서 생산된 쌀과 모든 물자를 전쟁을 위해 거둬 갔을 뿐만 아니라 징용·징병·학도병·근로정신대·군위안부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명의 한국인을 끌고 가 전장의 총알받이가 되게 하거나, 험한 노동을 하게 하거나, 군인들의 성노리개로 만들었다. 효용이 다 하면 버려두고 떠나거나, 집단 살해된 경우도 적지 않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군수공장과 광산, 조선소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사망한 사람도 수만 명에 이른다. 이때 간신히 살아남은 2만여 명의 피폭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후유증은 그들의 2세에게 이어지고 있다.

1951년에 시작되어 1965년에 마무리된 한일회담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성과 배상을 통해 이러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나라로 거듭나는 과정이어야 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끊기 위해 우리 산천 곳곳에 박아놓은 쇠말뚝처럼 우리의 가슴 깊숙이 숨어 있는 열패감을 극복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되찾는 과정이어야 했다. 그리하여 36년간 한

국을 식민지배하고 700만 명의 한국인을 사지에 몰아넣고도 배상은커녕 도의적 책임감마저 느끼지 못하는 일본의 도덕 불감증과 지독한 자국이기주의를 치유했어야 했다. 양국간의 진정한 화해도, 과거사 청산도 오직 그 과정 안에서 녹여 내어야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한일회담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었다.

Tip_ 원폭이 떨어진 히로시마는 지옥이었습니다

히로시마의 참상, 눈물로 증언한 광복순 할머니

광복순 할머니에게 60년 전 ‘그 날’ 은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기억이다. 그 날, 광 할머니는 일본 히로시마에 있었다.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광 할머니는 어머니를 여윈 뒤 히로시마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나 있었고, 동생을 맡은 광 할머니에겐 먹고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15분. 미공군의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으로 한 발의 원폭을 떨어뜨렸을 때, 광 할머니는 꽃다운 나이 열일곱 살이었다. 원자폭탄은 쉰새 30만 도의 고열을 뿜어내며 폭풍을 일으켰다. 그 시각, 광 할머니는 이웃 아주머니와 함께 배급을 타러 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잠시 아주머니를 세워놓고 화장실에 다녀오

는 사이, 엄청난 폭음과 함께 원폭이 터졌다. 본능적으로 귀와 눈을 막고 그 자리에 엎어졌지만, 여느 폭격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몸에서 피가 나갈래 ‘도와 달라’ 고 막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정적만이 감돌 뿐 너무나 고요했어요. 밖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정신없이 기어 나왔답니다.”

땅바닥이 너무 뜨거워, 원피스 자락을 찢어 나무합판을 발에 묶고 겨우 나와 보니 밖에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얗고 빨간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손수레로 운반되는 광경을 수도 없이 봤어요. 사람은 살아 있는데 피부는 거의 없어요. 상처가 오래된 사람들은 누런 구더기가 입 주변으로 꼼지락거리고 고름이 철철 넘쳤죠. 젓가락을 집어서 3센티미터나 되는 구더기를 빼내 발로 밟아 죽이던 때 그 소리…….”

곽 할머니는 지금까지 일본에 거주하면서 성치 않은 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 나가느라 고생도 많이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곽 할머니 같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았다. 한일협정이 체결된 후 배상을 요구하자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끝났으니 한국 정부에 얘기하라’,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니 일본 가서 얘기하라’며 서로 책임을 미뤄 이들을 6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국민으로 살게 했다.

2. 배상과 보상은 다르다

한일회담의 전개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배상과 보상
의 차이를 명확히해 둘 필요가 있다. 흔히들 별 생각 없이 배상
과 보상을 혼용하곤 하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보상이란 말 그대로 ‘합법적인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갚아
주는 것이다.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개인의 땅에 대해 ‘보상’을
해 준다는 표현이 그러하다. 그러나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
‘권리 침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갚아 주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징벌과 응징의 의미가 강하다.

특히나 전쟁 배상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과거에 대한 청산일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
국가와 그 국민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두 나라의 젊은
세대가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92년 1월부터 꼬박 13년 동안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
를 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맺힌 목소리로 부르
짖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군부에 의해 대대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행위이
며,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한국인은 일본군 위안부만이 아니
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부터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된 1945년까지만 쳐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은 줄

잡아 7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 중 조선 내에서 동원된 사람이 450~480만 명, 일본에 끌려간 사람이 120~150만 명,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로 끌려간 사람이 30~40만 명, 일본군 위안부가 10~13만 명이다. 당시 한국의 전체 인구가 2,200~2,400만 명이었으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일본에 강제동원된 셈이다. 강제동원된 사람들 중의 상당수가 죽거나 다치거나 정신적인 손상을 입었다.

Tip_ 일장기만 봐도 울렁거려요

한국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김학순 할머니는 한국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여성이다. 1924년 만주 길림에서 태어났으며, 1941년 17세의 어린 나이로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가 어떤 한국 남성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일본 정부가 계속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인정하기를 회피하자 김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공개하였다. 대부분의 군위안부 여성이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감추는 데 반해 김 할머니는 용감하게 실명을 밝히고 일제의 만행을 폭로함으로써 국내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일장기만 보아도 울렁거린다는 김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 제682차 수요집회
사진제공_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중국인들이 다 도망간 빈집에서 살았는데 낮엔 탄약 운반, 취사요원, 세탁부, 간호부로, 밤에는 일본 군인들의 위안 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시지애리는 여자에게 매를 맞거나 머리채를 잡아 채이고 옷이 벗겨진 채로 끌려 다녔어요. 부대에서 나오는 쌀과 부식으로 살았지만 우린 돈 한 푼 못 받고 만져도 못 봤어요. ……일본군의 배설물을 받아내는 공중변소 같은 인간 이하의 생활이 었기에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서도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김 할머니는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규탄집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을 제출할 때도 증인으로서 일본 법정에 출석하였다. 그리고 1997년 12월 16일, ‘일본 국가차원의 사과를 꼭 받아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피해국들의 배상 요구를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했다. 2차 대전의 가해자였던 독일은 과거의 죄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전쟁 피해국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등 국제법적 의무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마무리 지었다. 또한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나치의 만행에 대한 교육을 엄격히 실시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같은 전쟁의 가해자였던 일본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 오로지 자기 나라의 풍요를 추구할 뿐 역사적 책임의식이나 이웃 나라의 아픔을 돌이켜보는 여유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전쟁에 패배한 일본의 경제를 결정적으로 살려놓은 것은 한국전쟁이었다. 해외 식민지 시장의 상실과 생산설비 파괴로 심각하게 붕괴된 일본의 경제는 한국전쟁에서 군사보급기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숨통이 트여 1974년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배상은커녕 도의적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했다.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었다. 오히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에 도움이 되었다’, ‘일본이 패전 후 철수를 하면서 한국에 남긴 시설물의 재산 가치가 8조 엔에 달한다. 이것들을 회수해야 한다’ 는 등의 야비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고압적 태도를 국제

적으로 묵인해 준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에게는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는 일보다 일본을 하루 빨리 반공의 동맹군으로 만드는 일이 더 중요했다.

일본을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만들어 동북아 지역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던 미국은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미래를 열어 주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썼다. 제일 먼저 미국은 일본과 아시아의 전쟁 피해국 사이의 화해를 우선하여 전범국, 패전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도록 했다.

1951년 9월에 열린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가 바로 그 화해의 자리였다. 미국은 이 회의에서 태평양전쟁을 종결 처리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과 전쟁 상태에 있었던 50개 국에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나 한국은 협상국으로서 강화회의에 참가하지 못했다. 교전 당사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1949년 12월에 작성한 연합국 명단 초안에는 분명 한국이 포함돼 있었다. 최근에 공개된 미 국립공문서관 자료는 그 이유를 ‘한국은 10년 이상이나 저항운동이 있었던 해방영토로서 일본과 활발하게 싸운 공적이 있다. 조약이 중요한 이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참가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51년 4월 23일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의 조약 초안 담당자에게 “일본 국내의 조선인은 대부분 공산주의자다. 그들이 평화조약의 수혜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한



*** 1951년 영국 외무성 조사국이 제작한 전후 일본 영토 관련 지도

국이 조인국이 되면 일본 국내 조선인은 재산, 손해배상 등에 대해 연합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해 행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터무니없는 규모의 청구금액에 묻혀 버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일본의 억지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승전국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패전 처리에 참여하기 위해 1949년부터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준비해 왔던 한국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일본은 한국전쟁 내내 미국에 능동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미국의 마음을 샀다. 그리하여 한국을 전승국에서 제외하고 식민지 배상 문제, 재일교포 문제, 독도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

독도 문제를 좀더 부연하자면, 원래 미국무부가 대일강화조

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1~5차까지의 초안에서 독도는 엄연한 한국 영토로 기술되어 있었다. 최근, 1951년 영국 외무성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작하여 평화조약 초안과 함께 미국 정부에 보낸 지도가 발견되었는데, 독도와 일본 영토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요구와, 연합군최고사령부 대일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의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이 섬에 기상관측소와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안보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는 친일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땅' 이라는 점이 명시되지 못하였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독도 분쟁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 차원에서 독도를 고려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협정 체결에만 급급했던 박정희 정권 3자의 합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1962년 10월 29일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독도는 '갈매기들이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장소' 일 뿐이며 독도 문제 때문에 한일회담이 교착되고 있으니 아예 '일본 측에게 독도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제안했다' 고 말했다고 한다. 약소국의 대표로 회담장에 나갔으면 사력을 다해 국익을 수호해야 하건만, 이렇듯 망발을 흘리며 독도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으니 한일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고을 리가 없었다.

필리핀, 베트남 등 일본의 교전국으로 인정된 국가에게만 전쟁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따라, 한국은 북한과 함께 '전후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규정되었다. 고난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의 항일독립전쟁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는 배상이 아니라 별도의 청구권 논의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밖에도 샌프란시스코의 평화조약은 이후 14년 동안의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전쟁 배상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국제법상의 근거로서, 두고두고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

3. 박정희 이전의 한일회담

'반일, 반공, 북진통일'을 외쳤던 이승만 정권도 한일회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일본이라면 치가 떨리는 것이 당시 우리 국민의 공통된 정서였지만, 일제 식민 통치가 끝나고 이 땅에 정부가 수립된 이상 어떤 식으로든 일본과의 적절한 관계 정립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미국도 아시아의 두 '우방'이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다. 미국 쪽에 아는 사람이 많았던 이승만은 미국이 일본에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령 기간 동안 한일회담을 마

무리 짓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대사관에 회담 중재요청을 하였고, 마침내 1951년 10월에 미국의 주선으로 한일회담의 예비회담이 열렸다.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의 결과를 의식한 이승만 정권은 한일회담을 원만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이전의 배상 요구를 청구권 요구로 바꾸었다. 그런데 일본은 돌연 1952년 2월 15일에 열린 제1차 한일회담 본 회의에서 한국 재산의 85%에 달하는 구 일본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샌프란시스코강화회담에서 맺은 대일강화조약 제4조 ‘한국 내에 있는 귀속재산에 대한 처리를 한일 양국의 회담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대목을 곁고넘어진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식민지 점령국에 대한 피점령국의 청구권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이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국에 대일강화조약 4조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며 일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옹호하였다. ‘일본의 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배상은 거부한다’는 것이 당시 미국의 생각이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은 더욱 기세등등해졌고, 결국 제1차 한일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1953년 4월과 10월에 열린 2차·3차 한일회담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특히 제3차 회담은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타의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에 도움이 되었다’는

망언으로 한 달도 못되어 결렬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일본을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한 군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무조건 나포하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밀수품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강경한 대일정책을 실시하였다.

Tip_ 평화선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해, 우리의 독도와 일본의 오키도 사이에 ‘한일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기 바란다’는 의미로 평화선(peace line, 이승만 라인)을 긋고, 외국 어선이 그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금지했다. 우월한 장비를 갖춘 일본 어선이 일방적으로 동해를 휩쓸고 다녔던 당시 어업 실태를 감안할 때, 평화선 선포는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과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 대단히 유용한 조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이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일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어업협정을 맺어 우리 어민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회담이 결렬되자 미국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한일회담은 1957년까지 열리지 못했다. 이승만 정권이 회담에 소극적이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역청구권을 철회하지 않고 망언을 되풀이하는 일본의 오만함에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

린 일본을 제재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일본의 경제 부흥을 지원하는 미국의 대일정책에 있었다. 이승만은 미국의 일본우선 정책에 매우 강력히 반발했으나,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이승만은 아시아 방위를 담당할 국가는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잘 알려진 친미파 인사였지만, ‘미국이 일본에 옳은 일을 하도록 촉구하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 미국에 중재를 부탁할 수는 없다’ 며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대일관계에서 그의 극단적인 발언은 외교적 협상에서 종종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의 재임 기간에 열린 1~4차 한일회담은 극심한 감정 대립만 낳았을 뿐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1958년 4월 15일에 시작된 4차 회담 역시 북한의 재일한국인 북송이라는 뜻밖의 복병에 부딪혔다. 재일한국인 북송사업이란 북한이 일본공산당, 조총련과 연대하여 한·미·일 군사동맹의 기반이 될 한일회담을 저지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벌인 재일교포 입북운동이었다. 북한의 지원과 독려 속에,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약 10만여 명의 재일교포가 입북하였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한일회담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장면 정권이었다. 장면 정권은 ‘전 국민의 협조와 이해 속에서 한일회담을 타결하겠다’ 고 밝히고, 8년

동안 끌어온 한일회담을 조기에 타결지으려고 했다. 1960년 10월 25일 제5차 회담이 열렸다.

최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때 한일 양국은 한국이 제시한 8개 항목의 청구권을 항목별로 상당히 깊숙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장면 정부 역시 ‘청구권 문제’를 단순한 피해 보상의 차원에서 파악하였고, 일제의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도 불분명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실리를 얻으려고 한 것은 이승만 정권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었다.

당시 장면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을 이미 세워놓은 상태였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다. 장면 정부는 일본에 정치외교적인 압력을 가해 국익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1961년 5월 자민당 의원들이 한국을 찾았을 때, 장면은 “일본의 경제 번영은 한국군 60만 명과 100만 명의 피의 희생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장면 정권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짧았다. 제5차 회담이 성과를 내기도 전에 발발한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한일회담은 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4. 청산되지 못한 과거

‘조선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들의 역사, 전통, 문화를 모르게 하라. 동시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들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 무능한 행적, 악행 및 폐풍 등의 사례, 예컨대 외침을 당하여 항복한 수난사,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사실, 당파싸움 등을 들추어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에게 자국의 역사와 조상, 전통문화에 경멸감을 일으키게 하여 자국의 모든 것에 혐오감을 느끼게 하라. 그때 일본의 역사와 전통, 문화, 인물, 사적 등을 가르치면 자연히 그들이 일본을 흠모하게 되어 그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일제가 1922년에 발표한 ‘조선에서의 교육시책의 요결’이다. 단 몇 줄만 읽어 봐도, 일제가 우리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세뇌 교육의 효과가 금세 사라지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도 일본 제국주의가 36년 내내 지겹도록 조선 민중에게 세뇌한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일본한테 먹힐 만하니까 먹힌 거다.”

“일본 덕에 이만큼이라도 근대화된 거 아니냐?”

“무력하고 썩어빠진 조선 왕실이 계속 정권을 잡았다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나?”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런 극단적

인 굴종과 자기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방 후, 우리 민족이 당면한 문제는 친일파 처벌이었다. 친일파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강제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로 사지에 내몰리고 있을 때, 사회 각 분야에서 일본에 아첨하고 앞잡이 노릇을 하며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들이다.

친일파를 처벌하라는 민중의 소리가 거세게 울려 퍼지자, 국회는 서둘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만들었다. 일제 시대의 고위 관리, 독립운동을 잡아넣고 고문한 악질 경찰, 밀정, 일제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글을 쓴 작가와 언론인, 군수 공장을 세워 일본의 침략 전쟁을 도왔던 기업가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비호 아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친일파들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해방 후에도 여전히 일제시기의 재산과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민특위가 못마땅했다. 그들은 친일파 엄단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웠다. 친일파를 기반으로 집권한 이승만 역시 반민특위의 활동을 기꺼워하지 않았다. 결국 반민특위는 채 2년도 못돼 해산되고, 끌려갔던 친일파들의 상당수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렇게 해서 친일파 처벌 문제는 그 적절한 때를 놓친 채 훗날의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친일과 엄단을 주장한 것은, 단지 그들을 혼내 주자는 것이 아니었다. 일제에 대한 반감이 골수에 맺힌 우리 민족의 한풀이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우리 민족사를 그르친 이들을 법정에서 세워 우리에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원칙과 양심을 비웃는 기회주의적 가치관을 청산하여 흐려진 역사의 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단 한 차례도 정의가 승리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한국의 잔 다르크 유관순은 옥중에서 피를 뿌리며 죽었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은 사형을 당했으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김구는 해방된 고국땅을 밟은 지 1년 만에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에게 피살당했다.

정의와 원칙은 늘 패배했고, 끝끝내 살아서 승리하는 자는 시류에 편승하여 일신의 안일과 영달을 꾀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다. 기회주의자들은 일본에 붙었다가 미군정에 붙었다가 다시 독재 권력에 붙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들의 변신에는 언제나 보상이 따랐다. 그들의 성공은 처세와 요령과 패거리 문화가 정의와 원칙에 우선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반민특위가 해산되면서 친일과 청산의 과제는 후손들에게 떠넘겨졌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두고두고 후손들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후손들은 친일파들의 글이 실린 교과서로 공부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들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며 자랐고, 마침내는 친일 경력자가 쿠

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대통령이 되고, 한일회담을 졸속으로 마무리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정의는 단지 패배했을 뿐 민족의 가슴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독립투쟁을 전개했던 우리 선조들의 기개는 역사의 암흑기마다 후손들의 핏속에 되살아났다. 1960년 4·19혁명이 그러하였고,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항한 최초의 봉기 한일회담반대투쟁이 그러하였다.

2

박정희 정권의 등장



1. 반란의 시작

1961년 5월 16일 새벽 2시경.

1천여 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태운 수십 대의 트럭이 김포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캄캄한 새벽길을 먹어치우기라도 할 듯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질주하는 품이 당장 전쟁이라도 벌일 것처럼 무서운 기세였다. 이들은 해병 제1여단 소속의 군인들이었다. 5·16 반란군의 최선두에 선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한국 현대사를 어떤 비극으로 몰아갈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서울로, 서울로 내달리고만 있었다.

행렬은 이윽고 한강 인도교 남쪽 입구에 도착했다. 한강 어귀에는 이들의 진격을 막기 위해 헌병 제7중대가 버티고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해병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헌병대 사이에 잠시 험악한 입씨름이 오고갔다. 채 10분이나 지났을까. 옥신각신하던 양측의 기 싸움은 기어이 천지를 두들기는 듯한 요란한 총격전으로 이어졌다. 중과부적이었다. 잠깐 사이에 2명의 사

망자와 10여 명의 부상자를 낸 헌병대는 전의를 잃고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다. 해병대의 뒤를 이어 공수특전단까지 도착하자 반란군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의기양양하게 한강 다리를 건넌 반란군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서울 시내 중심가에 들어섰다. 이때가 새벽 4시경이었다. 이들은 주력부대를 파견하여 방송국과 시청, 치안국, 중앙전신국 등 서울의 중요한 시설과 기관을 차례로 장악해 나갔다. 같은 시각, 포천에서 출발한 제6군단 포병대 1천 300여 명은 이미 서울 삼각지에 있는 육군본부를 점령한 상태였다.

새벽 5시가 되자 남산의 중앙방송국에서는 때 아닌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박종세 아나운서는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가 성공했음을 알렸다. 쿠데타 제1성이었다.

“친애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꺾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 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군사혁명위원회는 6개 항의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

한다. ②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③ 이 나라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④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전력을 집중한다. ⑤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⑥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군인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학생들과 시민의 손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지 불과 1년여, 4·19혁명의 제단에 뿌려진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일어난 군사쿠데타였다. 쿠데타에 동원된 병력은 3천 600여 명. 이들의 뒤에는 김종필을 비롯한 육사 8기생들, 그리고 현역 육군 소장 박정희가 버티고 서 있었다. 이들의 쿠데타 모의는 꽤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60만 대군을 거느리게 된 군부는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그 힘을 바탕으로 일부 군인들은 1950년대부터 쿠데타를 모의하는 등 정치화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였고, 장성들 가운데 부패하지 않은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군 내부가 완전히 썩어 가고 있었다.

육사 8기생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게 된 것은 부패한 군 내부

에 대한 염증과 혐오, 그리고 진급에서 자꾸 누락되는 데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군 정화운동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들의 논의는 이참에 쿠데타를 일으키자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1961년 5월 16일, 총과 탱크를 앞세워 권력을 잡으려는 젊은 군인들의 야심찬 계획이 성공하게 되었다. 이 나라는 삼시에 군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2. 군인들의 나라

군과 정부가 초반에 확실한 진압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파국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60만 대군을 거느린 군부가 3,600명에 불과한 쿠데타군을 진압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를 진심으로 막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대통령 윤보선은 ‘올 것이 왔다’며 진한 한숨을 흘릴 뿐이었다.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은 침묵과 소극적 방어로 쿠데타의 성공을 도왔다. 쿠데타 정보를 입수한 장면 총리가 두 번이나 장도영에게 연락을 했으나, 그때마다 그는 ‘걱정 말라’는 대답을 되풀이하였다. 쿠데타를 분쇄하기 위해 실제로 그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대신에, 어느 줄을 잡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할 것인지 열심히 머리를 굴렸



*** 육사생도들의 가두행진을 지켜보고 있는 박정희 사진제공_김천길

다. 매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이 ‘왜 즉각 쿠데타 분쇄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장도영은 ‘동족 간에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5월 16일 오전 9시, 박정희 쿠데타군은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중장 장도영’의 명의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쿠데타 진압에 전념해야 할 육군참모총장이 어느 틈에 ‘혁명위원회 의장’으로 변신하고 만 것이다. 당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장면은 군인들을 피해 혜화동에 있는 깔멜수녀원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미 대사관에 두 차례 전화하여 쿠데타군을 진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당시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던 매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은 그린 주한 미국 대리대사와 함께 윤보선을

찾아가 쿠데타군을 진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윤보선은 우회적으로 이를 거절하면서 엉뚱하게 거국내각 수립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쿠데타 진압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장면 총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데 더 관심을 보였다. 매그루더는 곧 이 사실을 워싱턴에 보고했다.

“어떤 의미에선 쿠데타를 성공시킨 게 윤보선 씨일 수도 있어요. 당시 유엔군 사령관 매그루더가 윤 대통령에게 “사인만 하시면 쿠데타군을 진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윤보선 씨가 “우리 한국에선 며느리가 물에 빠져도 시아버지가 들어가서 안고 나오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박정희를 물리치려면 또 피를 흘려야 할 텐데 그건 못하겠다고 거절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쿠데타가 성공한 것 아닙니까(‘강원용 목사의 체험 한국현대사 ③’, 『신동아』 2004년 2월호).”

5월 18일에는 쿠데타를 지지하는 육사생도들의 가두행진이 있었다. 전두환 대위 등 육사 11기생들이 주도적으로 나선 이 시위는 군부가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육사생도 800여 명은 졸업생 장교 200여 명과 함께 동대문에서 시청 앞 광장까지의 행진을 마친 뒤, ‘혁명축하식’을 벌였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박정희 소장 일행이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쿠데타의 주역들은 시청 앞 광장에서 육사생도들의 사열을 받으며, 내심 ‘거사’의 성공을 확신하고 한 줄기 차디찬 미소를 머금었으리라.

이 날 낮, 55시간 동안 잠적해 있던 장면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중앙청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각 총사퇴를 발표했다.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는 그 이름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바꾸고, 군정의 실시에 들어갔다. 최고회의의 의장은 장도영, 부의장은 박정희. 각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물론 전국의 도지사, 시장, 군수, 읍장, 면장 등의 중요 직책은 모두 쿠데타 세력이 차지하였다.

쿠데타는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윤보선은 여전히 명목상의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거머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포고령과 계엄령을 통해 이 나라를 질락 필락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등 국민의 기본권은 통제되었고, 국회와 지방의회,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

6월 9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기구로 중앙정보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이 두 기구는 쿠데타 세력이 군정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친위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특히 김종필을 수장으로 한 중앙정보부는 정보·사찰 기능뿐 아니라 수사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는데, 그 막강한 힘을 주로 여야 정치인, 고급 공무원, 혁신계 인물, 학생 운동가들을 감시하거나 회유, 협박, 고문하는 데 썼다.

쿠데타 세력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권력을 다지는 데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우선 분명하게 지지 의사

를 밝히지 않는 장도영을 반혁명분자로 낙인찍어 권력의 바깥으로 밀어냈다. 일부 쿠데타 참여 세력들도 반혁명사건에 연루시켜 제거해 버렸다. 이제, 한국에서 감히 박정희에 대적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3. 박정희 정권의 ‘빨갱이 사냥’

한국 시간으로 5월 17일 새벽, 미국 정부는 쿠데타 불개입 방침을 주한미국대사관과 유엔군 사령관에게 통보했다. 당시 작 전통제권을 쥐고 있던 미국이 쿠데타에 불개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쿠데타를 승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미국이 5·16쿠데타 주체 세력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거둬들이진 것은 아니었다. 이집트의 나세르 쿠데타 이후, 미국은 제3세계 국가에서 군부세력들이 집권하고,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특히 해방 전 남로당 등 좌익 활동 경력이 있는 쿠데타의 지도자 박정희의 사상이 의심스러웠던 미국은 쿠데타 세력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7월 26일,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중단하고 군정 승인을 보류한다고 통고했다.

박정희는 자신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에게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는 국시로 내세운 ‘반공’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반공법을 제정하고, 혁명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장면 정권에 용공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군정 세력에 도전할 만한 모든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고, 혁신계 인사, 언론인, 사회단체 관계자, 교원노조 관계자, 피학살자유족회 관계자, 학생운동 지도자 등 4천여 명에 이르는 사회 불만세력과 좌익 활동 경력자들이 대대적으로 체포, 수감되었다.

사상 문제에 관한 한, 박정희는 미국의 의심을 풀기 위한 모든 일을 했다. ‘용공’의 혐의가 보이는 자는 물론, ‘용공’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그들이 실제로 용공 활동을 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붉은 사상’에 대한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박정희의 최종 목표였다.

반공이란 이름 아래 법과 정치는 실종되고, 4·19혁명의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던 이 나라는 한 순간에 차디찬 감옥, 거대한 병영으로 변모해 갔다. 미국은 마침내 박정희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5·16쿠데타 세력에게 손을 내밀었다. 때마침 미국 내부에서도 경제개발계획에 강한 집념을 보이는 제3세계 군부세력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1961년 11월 4일 미 국무장관 딘 러스크가 한국을 방문했고, 이에 화답하듯 11월 14일 미국으로 날아간 박정희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를 약속받았다. 이듬해인 1962년 3월, 윤보선이 대통령직을 사임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개막

을 위한 정해진 수순이었다.

박정희는 정말 좌익이었을까. 자신의 좌익 사상을 숨기기 위하여, 그토록 많은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붙여야 했을까.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간략하나마 박정희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자.

박정희는 1917년 11월 14일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왜소한 체구와 악착같은 성미로 인해, 어릴 때 별명은 ‘대추방망이’와 ‘악바리.’ 공부를 잘했던 박정희는 1등을 하면 급장을 시켜 주는 새로운 제도 덕분에 구미공립보통학교 3학년 때부터 줄곧 급장을 받았다. 그는 급우들을 통솔하는 데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급우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사정없이 뺨을 때린 적도 많았다고 한다.

대구사범에 진학한 청년 시절 박정희의 우상은 나폴레옹이었다. 그는 여러 작가가 쓴 『나폴레옹 전기』를 죄다 읽으려 할 정도로 나폴레옹을 숭배했다. 그가 1936년 4월 1일 대구사범을 졸업하기도 전에 세 살 아래의 김호남과 결혼하였다. 앓고 있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막내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서 강제로 이루어진 혼사였다.

1937년 3월 20일 대구사범을 졸업한 박정희는 만 20세의 나이에 문경 공립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그는 답답한 교사 생활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강권으로 이루어진 결혼 생활에도 별 재미를 느낄 수가 없었다. 그의 꿈은 멋진 군인이 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했다.



*** 만주군관학교 2기 예과졸업식에서 푸이로부터 은사품을 하사받는 박정희

만주국은 일본의 관동군이 만들어낸 괴뢰국이었다.

1940년 4월,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2기생으로 입교하였다. 1942년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1944년 4월 일본 육군사관학교까지 졸업했다. 일본 육사 시절, 1936년 일본에서 일어났던 2·26쿠데타 사건을 알게 된 그는 그 쿠데타 주동자들의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었다. 50년대 영관 장교 시절 박정희는 가까운 동료들에게 가끔 “2·26쿠데타 같은 것이 한국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곤 했다.

1944년 7월 일본 만주군 소위로 부임한 박정희는 다음 해에 해방이 되자 졸지에 패잔병 신세가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박정희의 형들은 교사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가 ‘거지꼴’로 돌아온 박정희를 박대했다. 특히 좌익 성향의 운동가였던 박정희의 셋째 형 박상희는 박정희의 친일 행적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1946년 9월 24일 박정희는 다시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하였고, 춘천에 있는 8연대에서 군대 생활을 시작하였

다. 그 무렵에는 어디를 가나 공산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고, 조선국방경비대까지 좌익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좌익으로 변신한 박정희는 차차 군부 내 남로당 우두머리로 성장해 가기 시작했다. 그는 1948년 8월 1일 소령으로 승진하였는데, 그해 10월 여순사건이 터지자 묘하게도 토벌사령부 작전장교로 차출되었다.

얼마 후 박정희는 군부 내의 좌익을 색출하는 숙군 과정에서 결국 체포되었다. 이제 그에게는 사형 당하는 일만 남아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또 한 번의 변신을 감행하여 불사조처럼 되살아났다. 자신이 알고 있는 군부 내 남로당원 명단을 군 수사기관에 모두 넘겨주고 죽음을 면했다고 한다. 박정희의 배신으로 그의 사관학교 중대장 시절의 많은 동료들과 생도들, 만주군 동기들이 희생당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그토록 의구심을 가졌던 박정희의 좌익 경력의 정체였다. 그는 단지, 출세를 위하여 세상의 변화에 따라 변신을 거듭해 온 기회주의자일 뿐이었다.

4. ‘혁명’의 앞과 뒤

이 무렵, 한국의 최고 유행어는 ‘재건’ 이었다. 마을마다, 직장마다 ‘재건’ 바람이 한창이었다. ‘국가 재건’은 ‘자립경제 구

축' 과 함께 5·16군사쿠데타 세력이 만들어 낸 표어였다. 이러한 시책에 따라 전국 행정 단위마다 재건국민운동축진회가 설치되었고, 재건복(신생활복) 입기, 국민가요 부르기, 저축운동 등 생활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사람들은 아침 일찍 마을회관 앞이나 학교 운동장에 모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령에 맞춰 '재건체조' 를 따라해야 했다. 일제시대의 '황국신민체조' 를 부활시킨 이 재건체조는 일본 군국주의 문화에 대한 향수가 진하게 깔려 있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혁명' 을 일으켰다는데, 왜 지키라는 휴전선은 내팽개쳐 두고 너도 나도 서울에 들어와 정치를 하려고 드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딱히 군사정권에 반감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이 나라 곳곳에 만들어 내는 군대식 통제 질서에 거부감이 생기기도 했지만, 나라남도 구제 못한다는 가난을 '국가 재건' 과 '자립 경제 구축' 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지켜보자 싶은 마음도 생겼다. 군인들답게 시원시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일 처리 방법도 상쾌한 데가 있었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의 하나였다. 이렇다 할 자원도, 돈도, 기술도 아무것도 없었다. 유엔에 등록된 120여 개국 중에서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는 인도뿐이었다. 필리핀의 국민소득이 170달러, 태국의 국민소득이 220달러일 때 한국의 국민소득은 고작 76달러였다.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했

던 국민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림에 시달렸다. 한일회담 반대투쟁의 주역이었던 김중태는 60년대 초창기를 이렇게 회고했다.

“그때의 피폐상은 말할 수가 없죠. 전쟁 나서 남북이 이동하면서 농토는 망가지고 폭격 맞고 그 판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애들 보고 굶었다고 하면 왜 라면도 안 먹었냐고 그러는데, 그땐 라면도 없었어요. 보릿고개 때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은 우선 국민들 밥이라도 먹게 해야 되겠다. 세 끼 밥만 먹여 주면 자기 정권을 지지해 주지 않겠나, 그땐 사실 그런 심정이었다고요.”

그러나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은 잇따라 실패하였다. 고리체에 허덕이는 농민을 구제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농어촌고리체정리 사업은 많은 가난한 농어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지만, 농업 자금 공급과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1962년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로 숨은 자금을 끌어내고 막 시작된 경제개발로 수직상승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물기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경제는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쿠데타 직후에 부정축재 기업인들을 구속한 군사정권은 이들의 자산을 몰수하겠노라 큰소리치더니 얼마 후 이들을 슬그머니 풀어주고 말았다. 거기다, 민주공화당이 정치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속으로 불거져 나온 각종 비리 사건들은 쿠데타 세력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박정희가 1963년 여름에 정권을 이양한다고 하였으니 좀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4·19혁명으로 집권한 장면 정권을 좌지우지했던 학생운동권도 아직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군인들의 총칼과 탱크가 무서워서 아니었다. 군사정권의 계속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민정 이양 약속’은 군인들이 일으킨 ‘혁명’의 순수성을 말해 주는 듯했고, 쿠데타 세력의 본질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했다.

일부 혁신계 인사들과 지식인의 대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잡지 『사상계』 1961년 6월호는 권두언 「5·16혁명과 민족의 진로」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란의 위기에서 민족적 활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최후 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다름 아닌 5·16군사혁명이다. ……4·19혁명이 입헌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혁명이었다면, 5·16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비록 ‘4·19혁명의 계승’과 군사정권이 약속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의 민정 이양’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쿠데타를 지지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민정 이양 시기가 도래하자 쿠데타 세력은 군정을 연장하기 위해 서서히 숨겨 온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군부는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어 269명이나 되는 기성 정치인들의 발을 묶어 놓은 뒤, 중앙정보부와 출처를 알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였다. 또 대통령의 독단적인 통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 민정 이양 약속도, 대통령 불출마 선언도 수차례나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무력 통치, 비리 의혹, 정치 자금 남용, 단군 이래 최악의 민생고, 치솟는 물가…… 군정 3년째를 맞은 국민들은 5·16 세력에게 불신을 눈길을 던지기 시작했다. 군부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며 탐색전을 펼치던 학생운동 세력도 긴 동면에서 깨어나 박정희 정권을 뿌리째 흔들어놓을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일회담반대투쟁이었다.

3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더냐?



1.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나는 1961년 4월,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다. 입학 당시만 하더라도 이승만 백색 독재를 몰아낸 4·19혁명의 뒤끝이라, 이제 새로운 민족사의 진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입학한 지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우리는 5·16군사쿠데타를 만나게 되었다. 한강다리를 건너는 쿠데타군의 총성과 함께 우리의 꿈도 희망도 사라졌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군사독재와의 투쟁이요, 이 땅에서 군사독재를 몰아내는 것이었다. ……당시 쿠데타정권은 4년 더 군정을 연장하겠다고 나섰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군정연장결사반대투쟁에 나섰고, 군정연장계획은 백지화되었지만 군복을 벗은 군사통치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함께 대학생활을 시작한 한일회담반대



••• 군정연장 반대시위

투쟁의 주역 김정남의 기록이다. 식민지 시대의 교육을 받은 부모 밑에서 자란 세대, 한문 대신 한글을 배우고 미국식 교육을 받으며 자란 이 젊은이들은 다행스럽게도 1960년 4·19혁명을 통해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눈떠가고 있었다. 1960년대 초기에 대학에 들어온 이 젊은이들은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의 행태를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쿠데타 세력이 경제개발 자금을 따내기 위해 일본과의 회담을 재개할 때, 이 당찬 젊은이들은 저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한일회담을 서두르

는지, 한일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1963년 2학기가 되자 대학가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다른 때보다 유난히 학과별, 출신학교별 모임이 잦았고, 술 자리에서 시국을 논하는 학생들의 표정도 다소 들떠 보였다. 대학가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활기에 싸인 것은 1961년 ‘민통련 사건’ 이후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61년 5월 3일,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민통련)’을 조직한 전국 20여 개 대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외치며 남북학생회담 개최를 제안하였다가 되서리를 맞았다. 이 사건 이후 학생운동권은 ‘행동’의 발톱을 물밑 깊숙이 감춘 채, 군사 쿠데타가 이 사회에 몰고 온 변화를 주시하며 진화와 모색을 거듭해 왔다.

군정 초기, 쿠데타 세력에게 가졌던 실낱같은 기대감을 완전히 버린 학생들은 차분히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마치 자유당 말기를 연상케 하는 5·16 주체 세력들의 부정부패와 횡포, 외세 의존,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사정은 5·16군사정권이 4·19혁명의 진정한 계승자가 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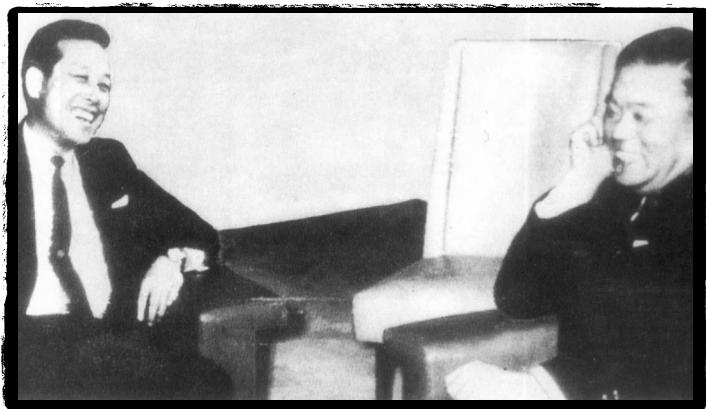
이 무렵, 학생운동권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회담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경제개발로 주저앉히기 위해 한일회담을 서두르고 있었다. 쿠데타로 집권하였다는 약점을 만회하고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에게 ‘이 나라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했다. 그러자면 이 나라 경제를 부흥시킬 만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일본의 자금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 회담은 대단히 유익한 기회였다.

또한 그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했다. 그간 대소전진 기지로서 한국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던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일본에게 극동지역 안보의 책임과 부담을 떠맡기려 했다. 그러기 위해선 한일회담을 통해 한국을 일본 경제 발전의 배후지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정희 정권을 압박했다. 1962년 7월 미 국무부는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훈령에서 “한국 정부에 청구권의 명목에 구매받지 말고 일본의 경제 원조를 받아들이라고 전하고,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원조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압력을 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 8월 23일에는 케네디 미 대통령이 직접 박정희에게 친서를 보내 한일회담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일본 자본주의의 요구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일본의 대호황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은 과잉 생산된 상품과 자본을 처리하기 위한 해외시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한국은 일본 독점자본이 눈독을 들일 만한 가장 훌륭한 시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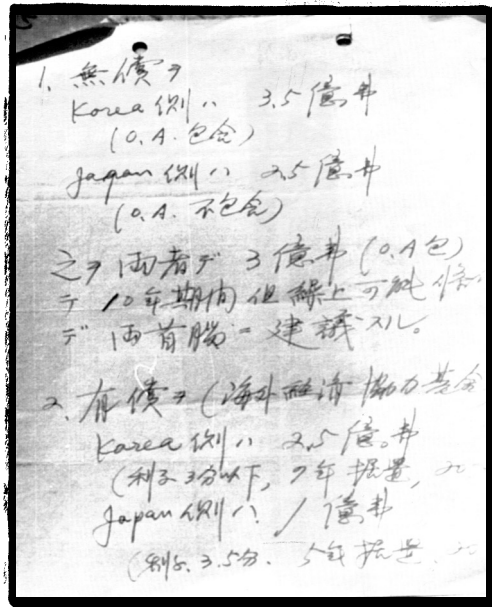
1961년 6월 20일 케네디를 만난 이케다 일본 수상은 “부산이



*** 회담중인 김종필-오히라 사진제공_연합포토

적화될 경우 일본의 치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은 당장에라도 한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한일회담은 재개되어야 한다”라고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 박정희 군사정권의 이해관계가 톱니바퀴처럼 절묘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가운데 한일회담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한일회담에 임하는 양국의 태도였다. 시종일관 고압적이고 오만하기 그지없는 일본의 태도는, 1951년 10월 이승만 정권과 첫 접촉을 가질 때와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런 일본에 질질 끌려가는 듯한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자세는 국민들을 더욱 분통터지게 만들었다. 결국 일본이 노리는 것은 ‘경제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정부의 ‘재산권과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이것은 한일회담을 통해



... 김-오히라 메모 사진제공_연합포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은 그때까지 한국이 고수해 온 '권리 요구'의 입장에서 '도움'과 '원조'를 구걸하는 입장으로 대폭 물러났다. 그 결과가 바로 1962년 11월 12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오히라 일본 외상의 비밀 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김종필과 오히라 일본 외상은 한일회담 타결의 조건으로 일본이 한국에게 제공할 돈의 액수를 밝힌 메모를 교환하였다. '무상공여 3억 달러, 유상정부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김-오히라 메모'는 지

난 10여 년간의 대일협상과 과거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김-오히라 회담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간 한국이 요구해 온 ‘대일청구권’ 을 포기하였다는 점이었다. 일본이 제공하는 자금의 명목도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각자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한국의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은 그 돈을 ‘독립축하금’ 으로 해석했다. 일본에 대한 배상 요구를 경제협력 차원으로 떨어뜨린 이 회담은 식민지 시대의 고통과 치욕을 잊지 못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고, 한일회담반대투쟁의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한일회담반대운동이 이토록 강력하게 전개된 데에는 박정희 정권이 한일회담을 이용하여 일본 정계와 재계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한일회담을 강력하게 지지한 정치세력은 대부분 극우·반공의 정치지도자로서 한국에서 벌어진 5·16쿠데타와 박정희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일본 내 세력들은 한일회담 진행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검은 뒷거래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8월 비밀 해제되어 그 내용이 공개된 CIA 특별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불법 정치자금 거래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민주공화당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특히 6, 7차 회담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는 일본 기업들로부터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1961년부터 1965년까지 6개의 일본 기업이 각각 1백만~2천만 달러씩 총 6,600만 달러의 자금을 공화당에 제공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낱알이 기록돼 있다.

이 보고서는 김종필의 ‘1967년 대통령 선거운동자금으로 2천 6백만 달러가 공화당은 필요하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 역시 한일협정을 추진한 대가,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독점권을 갖도록 해 준 대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방출한 쌀 60,000톤의 일본 수출을 통제했던 8개 한국 기업이 민주공화당에 11만 5,000달러를 제공했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이 CIA 보고서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공개하지는 않음에도, ‘Well Founded(근거가 있고 신용할 만한 증거가 있는)’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이 신뢰할 만한 정보임을 짐작케 한다.

박정희 정권이 굴욕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이 같은 정치적 목적이 도사리고 있었고, 한일회담에 대한 야당과 학생들의 거센 저항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앞에서는 조선인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학도병 등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 명목으로 청구권 자금 협상을 벌이면서 뒤로는 이를 빌미로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박정희 정권의 행태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폭발한 것이다.

2. 때는 왔다

학생운동권의 움직임이 빨라진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다. 1963년 여름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윤보선과 박정희의 대결로 압축되는 10월 15일의 대통령 선거에 맞춰져 있었다. 군복을 벗은 박정희는 ‘더 이상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태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며 울먹였고, 윤보선은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을 들먹이며 ‘사상 논쟁’ 의 불을 지폈다.

온 나라가 흥청대는 선거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5·16 이후 지리멸렬해진 학생운동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각 대학의 지도부와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선배 운동권 그룹 간에 정세 분석과 투쟁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들은 한일회담반대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 박정희 정권 타도 투쟁의 계기로 삼자고 의견을 모았다.

학생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한일회담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을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해 왔다는 점이다. 미국도, 일본도, 대한민국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한일 간에 협정이 체결되면 남북의 통일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학생들을 긴장시켰다. 당시 서울 문리대 정치학과 3학년으로 한일회담반대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김정남의 회고다.

“명분은 박 정권 반대와 한일회담 굴욕외교 반대였지만, 한일회담이 되고 나면 민족은 영원히 분열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알

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민족이 하나 되는 길이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에 대한 몸부림이랄까…….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가 얼마 안됐을 때니까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고, 우리 아버지들이 했던 독립운동의 연장선 위에서 투쟁한다는 생각이 다들 강했어요.”

1963년 2학기가 시작되자 각 학교에는 ‘연구회’ 형태의 새로운 학술 서클이 하나들 등장하기 시작했다. 서울 문리대의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서울 법대의 사회법학회, 고려대의 우리문화연구회, 성균관대의 민족문제연구회 등이 그것이었다. 이 서클들은 학생운동권이 대중운동의 세를 모으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군사정권의 눈을 속이기 위해 대부분 온건한 노선을 가진 학술단체를 표방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서울 문리대의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는 이듬해인 1964년부터 시작되는 한일회담반대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이듬해인 1964년 봄을 강타한 3·24시위는 민비연이 주도하고 서울 문리대·고려대·연세대의 공개·비공개 조직이 힘을 합쳐 만들어 낸 빛나는 연대투쟁이었다.

학생들의 격렬한 투쟁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15만여 표 차이로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64년 1월 10일 연두교서에서 “강력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보다 나은 조건하에서 보다 많은 외자를 확보”할 것이며, “자유진영 상호간의 결속의 강화로써 극동의 안전과 평화유지에 기여

한다는 대국적 견지에 입각” 하여 한일회담을 조속히 타결하겠노라 선언하였다. 이것은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가장 먼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한국의 어민들이었다. 한국 정부가 한일회담 조속 타결을 위해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평화선 문제까지 대폭 양보했기 때문이다. 사실 평화선 문제는 이미 대통령 선거 이전에 양보한 것이었으나, 어민들의 표를 잃을까 두려워 발표 시기를 늦췄을 뿐이었다. 1월 21일 어업 단체들은 ‘평화선 사수대회’를 개최하는 등 평화선 양보 결사반대에 나섰다. 2월 10일 민정당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평화선 양보하는 한일회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어민들과 야당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3월 타결, 4월 조인, 5월 비준’으로 요약되는 한일회담 조기 타결 방침을 밀어붙였다. 이에 민정당, 삼민회 등 야당은 3월 9일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범투위)’를 구성하고 ① 한일회담 즉시 중지 ② 일본의 반성과 사과 ③ 평화선 수호를 위한 온 국민의 궤기를 호소하였다.

3월 15일 범투위가 부산 경남중학교에서 개최한 ‘대일굴욕외교반대 강연회’에는 약 3만여 명의 청중이 모여들었고, 목포에서 열린 한일회담 반대유세에는 약 2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2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한일회담 반대집회를 연 범투위는, 21일 서울고등학교 교정에



*** 1964년 대일 골육외교 성토대회에 참석한 윤보선, 함석헌, 장준하의 모습
사진제공_경향포토

서 함석헌, 윤보선, 장준하, 조영규 등을 연사로 내세워 ‘대일골육외교반대 강연회’를 열었다. 연사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일협상은 일본의 경제식민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박정희 정권을 성토했다. 강연회가 끝나자 4만여 군중은 학생들을 앞장세워 세종로 4거리까지 진출하였다.

3월 23일, 일본 동경으로 날아간 김종필은 들불처럼 타오르는 반대투쟁을 비웃기라도 하듯 ‘5월 초순에 한일협정이 조인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김종필의 동경 발언은 거세게 타오르는 투쟁의 불길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었다. 그 불길에 타버린 것은 바로 김종필 자신이었다. 다음날인 3월 24일, 서울 문리대에서는 두 개의 허수아비가 화형에 처해졌는데, 하나는 한일 국교정상화의 파트너인 일본 수상 이케다, 또 하나는 ‘제2의 이



*** 1964년 3월 24일 서울 문리대생들이 이완용과 이케다의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있다
사진제공_경향포토

완용'이라 불리는 김종필이었다.

이 집회의 사회를 본 사람은 한일굴욕회담반대투쟁위원회(굴욕투위) 위원장 김종태로, 뛰어난 대중성과 말솜씨로 자연스럽게 학생운동 지도자로 부각된 인물이었다. 그는 이 날의 연대투쟁을 성공시키기 위해 평소에 잘 아는 고려대 최장집, 연세대 정준성과 긴밀하게 접촉해 왔다.

화형식이 끝나자 학생들은 “① 민족 반역적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고 동경 체제 매국정상배는 일로 귀국하라 ②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을 해군력을 동원하여 격침하라 ③ 한국에 상륙한 일본 독점자본의 척후병을 축출하라 ④ 친일 추구하는 국내 매관 자본가를 타살하라 ⑤ 미국은 한일회담에 관여하지 말라 ⑥ 제국주의 일본 자민당 정권은 너희들의 파렴치를 신의

양화를 입어 속죄하라 ⑦ 박 정권은 민족 분노의 표현을 날조
공갈로 봉쇄치 말라 ⑧ 오늘 우리의 쫓기는 ‘신체국주의자’ 에
대한 반대투쟁의 기점임을 만천하에 공포한다”는 내용의 결의
문을 채택하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학생들의 맨 앞에서 흥분한 시위대를 차분히 교문 밖으로 이
끌어 낸 것은 현승일이었다. 현승일은 이 날 발표된 선언문의
작성자 김도현, 김중태와 함께 한일회담반대투쟁을 6·3투쟁이
라는 클라이맥스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교문을
박차고 종로5가까지 진출한 시위대는, 2시 30분경 서울 법대생
3백여 명이 합류해 오자 용기백배하여 곤봉 등으로 진압하는
경찰에 격렬하게 맞섰다.

같은 날 오후 3시경, 고려대생 1천여 명도 ‘주체성을 잃은 굴
욕적인 대일외교 반대선언문’ 을 채택하고 일제히 교문을 나섰
다. 금세 1천 5백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종로4가까지 진출
하였다. 경찰은 최루탄을 터뜨리며 진압에 나섰으나 성난 물결
을 막을 수는 없었다. 고대생들의 시위를 응원하던 대광고교생
2백여 명도 반도호텔 앞에서 ‘대일굴욕외교반대’ 를 외치며 연
좌시위를 벌였으며, 연세대생 2천 300여 명도 교내에서 집회를
가졌다.

시위대는 국회의사당을 향해 꾸역꾸역 밀려들었다. 5천여 명
의 시위대와 이를 따르는 시민들, 최루탄과 곤봉으로 이를 저지
하는 경찰들로 서울 시내는 늦은 저녁까지 몸살을 앓았다. 이

날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한일회담반대투쟁에 나선 학생들과 시민들의 숫자는 총 8만여 명.

“미국은 한일회담에 간섭치 말라”, “나라 팔아먹는 한일회담 즉각 중단하라”, “제2의 이완용을 소환하라”는 외침이 전국에 메아리치던 그 순간에도, 박정희 정권은 이 투쟁의 불길이 1965년까지 이어지며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3.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더냐

3·24시위는 4·19혁명 이후 최대의 시위이자, 5·16쿠데타 이후 최초의 대규모 시위였다. 고대생들이 결의문 1항에서 “우리의 행동은 반정부 데모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3·24시위대의 요구는 대체로 박 정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선을 넘지 않았다. 이는 수개월 전부터 3·24시위를 ‘모의’ 했던 학생운동 배후그룹의 전술로서, 1차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대일 저 자세 외교를 집중 성토했으로써 대중시위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반외세 반정부 운동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박정희 정권의 대응도 온건한 편이었다. 24일 아침 대구로 떠났다가 대규모 시위 소식을 보고받고 급히 서울로 돌아온 박정희는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날 밤 연

행된 학생들을 대부분 석방하였다. 또한 박 정권은 각 대학 학생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일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통금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온건한 수습 방안을 내놓았다.

다음날인 25일에도 많은 수의 학생들이 시내로 쏟아져 나왔다. 배명, 성동, 송파중고생 약 2천여 명도 대학생들의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화여대 학생들도 비상 학생총회에서 대일 굴욕외교를 성토했고, 평화선을 지키는 경비정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에 나서기로 결의하였다. 이 모금운동은 다소 소극적인 방식이었지만, 이대생들에게는 4·19혁명 당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1965년 비준반대투쟁의 앞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준 소중한 단결의 경험이었다. 부산, 대구, 전주 등 지방의 각 급 학교 학생들도 굴욕적인 한일회담 즉각 중지를 요구하며 가두로 진출하였다.

정부의 평화시위 허용 방침에 따라, 이날의 시위는 별다른 충돌 없이 비교적 차분하고 평온하게 진행되었다. 청와대 앞에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던 경찰들은 시위대가 청와대 쪽으로 방향을 틀자 비로소 최루탄을 발사하며 앞길을 막아섰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중앙청에서는 정부의 약속대로 서울시내 56개 대학 학생 대표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학생 간담회가 열렸다. 그러나 문교부 장관 고광만이 주제와 상관없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자 간담회는 결렬되고 말았다. 학생들은 퇴장에 앞서 ① 한일회담의 즉각 중지 ② 일본에 체류 중인 대표

소환 ③ 대통령 면담 ④ 구속 학생의 전원 석방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6일, 박정희는 특별담화를 통해 “학생들의 우국충정은 이해되나 시위는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한일회담 협상에는 추호의 흑막도 없으며 만약 있다면 역적으로 처단되어야 한다”면서 재임 중 자신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시위 학생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인 ‘한일회담 즉각 중지’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고교생들이 주동이 되고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형식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고교생들이 한일회담반대투쟁의 전면에서 뛰어들면서 시위 규모는 2만5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치안당국은 마치 4·19혁명을 방불케 하는 시위의 전개 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위 진압을 위해 경기도경의 경찰력은 물론 수도경비사령부의 공수단 병력까지 끌어 들였다.

특히 이날 시위에서 눈길을 끈 것은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 드냐’라는 구호였다. 이 구호는 단순히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박정희 정권이 국시로 내건 ‘반공’을 좀더 세련화시키는 과정에서 자랑스럽게 내걸었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은 것이었다. 경기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치켜든 플래카드에서 발견된 이 구호의 제안자는 『전태일 평전』의 저자 조영래. 당시 조영래는 자신의 경기고 선배인 서울 문리대 송철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Tip_ 민족적 민주주의

소설가 김동리의 형이자 반공주의 지식인으로 유명한 김범부가 5·16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게 진상한 구호. 박정희는 혁명 공약에서 국시로 내세운 '반공'이란 용어대신 이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애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수상이 내건 '교도적 민주주의(Guided Democracy)'를 모방한 것으로, 군사독재를 합리화하는 후진국형 아류 민주주의에 불과한 것이었다. 뒤늦게 '민족적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박정희는 부랴부랴 그 표현을 '자유 민주주의'로 바꾸게 되었다.

한일회담반대투쟁은 지방의 주요도시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3월 26일 부산, 수원, 대전, 대구 등 8개 도시에서 약 1만 2천여 명이 시위에 나섰으며, 27일에는 시위의 물결이 안성, 예산 등 지방 군소도시로까지 스며들어 16개 도시에서 4만 3천여 명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3·24시위 이후 최대 규모였다.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박정희 정권은 27일, 비판의 주요 대상이었던 동경의 김종필을 긴급 소환하였고, 회담이 재개될 때를 대비하여 대표단을 직업외교관만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30일에는 서울시내 11개 종합대학 학생대표와 박정희의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31일에는 38개 대학 57명의 학생

대표를 비공식적으로 초청하여 ‘김종필-오히라 메모’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물론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곧 한일회담의 종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일회담 일정이 잠시 유보되자 시위는 일단 진정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향후 운동의 방향에 대한 별다른 계획도 없이 시위가 잦아든 것은 당시 한일회담반대투쟁의 내용과 수준이 아직 ‘굴욕외교 반대’의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 역시 아직은 시위 학생들을 하나의 압력단체 정도로 인식하여 이들에게 정부의 의도를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차츰 초반의 원색적인 비난과 울분에서 벗어나 평화선 수호 문제, 청구권 문제, 외교 자세 문제 등 회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고, 그 비판의 차원도 단순한 한일회담 반대 수준을 넘어 사실상 박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4. 박정희의 한일회담, 무엇이 문제인가

1964년 3월 김종필과 이케다의 회담에서 대체적인 윤곽이 확정된 한일회담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965년 6월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한일회담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는 크게 ① 한일 국교정상화의 의의와 그 기본적인 방향을 담은 기본관계조약 ② 대일 재산청구권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③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나 대우에 관한 협정 ④ 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협정 등 네 가지였다. 이 중 한국 측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기본관계와 청구권 문제에 대한 것이었고, 일본 측은 평화선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① 기본관계 조약

한일협정이 안고 있는 가장 뼈아픈 결함은 한일합방이 무효이며 잘못된 과거사였음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일협정문의 전문과 7조로 구성된 기본관계 조약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우선 기본관계조약의 전문과 1910년에 체결된 한일합방조약의 전문을 비교해 보자.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돌아보아 행복을 증진하여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는 바…….’ (한일합방조약 전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여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

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한일협정문 전문)

일제의 식민지 건설을 ‘동양의 영구한 평화’로 표현한 한일 합방조약 전문과, 일제의 한국 침략을 ‘선린관계’로 표현한 한일협정서 전문이 주는 느낌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처음부터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일본은 회담 내내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만하게도 ‘일본의 통치는 한국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영광스러운 제국주의’, ‘일·한 양국은 부차지간’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도 박정희 정권은 회담을 밀어붙이는 데 급급한 나머지 일본이 과거의 식민통치를 합법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야욕까지도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최근까지 반복되는 일본 정치가들의 역사 망언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② 대일 재산청구권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우리 국민들이 한일회담이 재개될 때마다 ‘굴욕회담’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은 단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요구에 무조건 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식민 지배 36년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더 큰 문제는 결국 식민 지배에 대해 반성

하지 않는 일본의 침략주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일본이 깔아 놓은 판에 말려들었다는 것이다.

굴욕외교·저자세 외교로 지탄받았던 이승만·장면 정권도 대일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에 와서는 청구권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대신 무상 공여, 차관, 경제협력이라는 용어로 대치되었다. ‘청구권’으로 알려진 조항의 실제적인 명칭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무상공여 3억 달러, 유상채정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3억 달러 이상.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월남, 태국 등에 명백한 ‘배상’의 뜻을 밝히며 수억 달러를 지불하였던 일본이, 36년간 수탈한 한국에 대해 내놓은 금액으로는 너무나 약소하다. 그마저도 경제협력 차원에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국 측은 일일이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무상 공여 3억 달러’라는 것도 현금이 아니라 일본에서 생산된 기자재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으니, 일본 자본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통로를 환히 열어놓은 셈이었다. 결국 이 협정으로, 박정희 정권은 일본 자본의 본격적인 한국 진출과 한국 경제의 대일 종속을 가속화시키는 경제 침략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 김중태는 이렇게 말한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 보세요. 변호사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입원비는 얼마가 나왔는지, 이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의 연봉은 얼마고 교통사고 때문에 몇 년간 일을 못하게 됐으니 그것까지 계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돈 만 원 주고 끝내자고 하면 어떨겠어요. 배상 문제가 그런 거예요. 패전국 일본이 36년간 수탈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를 강제점령한 그 사실에다 전쟁통에 호남평야에서 나는 쌀을 강제로 뺏아서 군량미로 쓴 거, 일본군에 끌려가서 죽은 전사자, 남자들 강제로 잡아가지고 가서 군수공장 같은 데서 일하게 한 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일하다 원자폭탄 맞은 거…… 그런데 박정희의 한일회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해결한 게 없어요. 그때 조금이라도 해결했다면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가 나오겠어요? (국민들의 희생을) 완전히 헐값으로 넘긴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반대한 한일회담의 본질이에요.”

더욱이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 협상을 타결 짓는 과정에서 ‘추후에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각자 국내 문제로 한다’고 하였고, 이는 훗날 일제 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개인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물론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 보상에 쓰긴 했다.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사망자에 한해 1인당 30만 원씩 총 8,552명에게 25억 7,000만 원을, 재산 피해 7만 4,967건에 대해 66억 2,000만 원을 보상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제한된 일부에 대한 보

상으로, 실질적인 개인보상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Tip_ 탄광 막장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

강제동원 피해자 임병희 할아버지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에 사는 임병희 할아버지(80세)는 1942년 4월 집안의 기둥이었던 큰형 대신 징용을 갔다. 기차와 배를 번갈아 타고 할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호로나이 탄광이었다. 임 할아버지는 3년 4개월 동안 콩깍묵과 다꾸앙을 먹으면서 보호 장구도 없이 수백 미터 지하 막장에서 일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다. 갱도가 무너져 광부 10여 명과 함께 14일 동안 막장에 갇힌 적도 있다.

“그땐 죽는 줄로만 알았어. 공기를 불어넣는 파이프를 통해 들어온 주먹밥과 막장에 있던 말의 오줌을 받아먹으며 구출되기만 기다렸지.”

호로나이의 막장에서 죽어간 한국인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도 없다. 임 할아버지는 그래도 살아서 돌아왔으니 운이 좋은 편이라 해야 할까. 전쟁이 끝난 후 임 할아버지는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막장에서 함께 일하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이 쯔처럼 잊혀지지 않는다는 임 할아버지는 ‘불쌍한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강제노역의 대가는 꼭 받아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③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는 일본의 조선식민지배가 만들어 낸 희생양이었다. 초기에는 주로 일본의 가혹한 경제수탈로 생계의 터전을 잃어 버린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1937년부터는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전쟁터나 군수산업의 위험한 생산현장으로 수많은 한국인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 강제징용자들은 탄광, 공사장, 군수공장 등에 배치되어 온갖 박해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쟁의 광기로 이성을 잃은 일본인에 의해 6,000여 명의 한국인이 무참히 학살되기도 했다.

살아남은 재일한국인들은 해방 직전부터 귀국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약 80만 명이 귀국하였고, 194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15만 5천 명이 귀국하여 일본에 남게 된 한국인은 1960년대 초 현재 60여만 명이었다. 이들이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에 남게 된 이유는 첫째, 일본이 귀국하는 재일한국인의 재산을 규제하였기 때문이고, 둘째, 해방 후 한국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홍수, 전염병 등으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며, 셋째, 일본에 잔류한 한국인의 반수 이상이 1930년대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사람들로써 이미 한국으로 귀환하기에는 생활이 많이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51년 10월 한일 예비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① 재일한국인이 일본에 정착하게 된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다른 외국인과는 다르게 특수한 법적 지위와 처우가 부여되어야 한다. ② 둘째, 재일교포 중 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을 희망하는 자는 그들의 생활근거가 되어 왔던 현금을 포함한 동산·부동산의 전 재산을 반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③ 이들이 일본에 영주하게 되면 교육, 사회보장, 재산권 등의 수익 및 권리행사에 있어서 일본 국민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④ 모든 재일교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결코 북한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인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는 것은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재일한국인을 모두 인수하라고 요구하고, 재일교포의 복송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일교포 문제를 협상의 무기로 이용하려 했다. 전쟁 후에도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교포들은 일본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영주권 문제, 강제 퇴거 문제 등의 사안이 생길 때마다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취업, 진학, 영업 등에서도 심한 민족적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 왔다.

한일회담에서 이에 대한 책임 규명,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아냈어야 할 박정희 정권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채 우리의 동포를

일본 정부의 임의적 처분에 맡겨 버리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는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져 은사마와 한류의 거품 속에서도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재일교포들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

Tip_ 강제동원의 아픔이 살아 있는 우토로 마을

일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51번지.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교토 군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정착하여 마을을 이룬 곳이다. 1,300여 명의 주민 1세대는 대부분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왔거나, 일본군 징용을 피하기 위해 노무를 선택한 사람, 논밭을 빼앗기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 간 사람이었다.

잡풀이 뒤덮인 채 버려진 이 땅은 원래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었다. 그러나 우토로의 조선인들은 이 황무지에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고 '6천 평의 작은 조선'을 만들어 갔다. 조선인들은 '한바'라고 불리는 가건물을 만들어 합숙생활을 했는데, 남편과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방 하나가 배당됐지만, 혼자서 온 사람들은 칸을 나누어 생활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자 비행장 건설은 중단되었고, 이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였다. 많은 조선인들이 해방의 기쁨을 안고 자비로 일본을 빠져나갔지만, 조국에 친척도 집도 아무것도 남아 있



*** 우투로 마을 '강제철거 반대-여기서 살고싶다'
사진제공_임재현

지 않았던 사람들, 배 샅조차 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았다.

일본 정부와 군수회사는 전후 보상은커녕 최소한의 인도적인 배려도 없이 60년 동안 이들을 방치했다. 일본 사회의 극심한 차별 속에서 조선인이 취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제대로 교육을 받는 일도 쉽지 않았다. 우투로의 조선인들은 우물물을 길어 마시고, 폐품 회수업이나 공사판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며 도왔고, 일본 국적 취득을 거부한 채 언젠가는 조국에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이 뿌리내린 그 땅에서 민족학교를 세우고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며 민족의 얼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1987년, 군수회사의 뒤를 이은 (주)닛산차체가 주민들 몰래

우토로의 토지를 '서일본식산' 이란 회사에 팔아넘겼다. '서일본식산' 은 1989년 '건물을 비우고 나가라' 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우토로의 가난한 터전을 지켜 온 조선인들은 전쟁 책임에 대한 보상과 거주권을 애타게 요구하였지만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끝내 서일본식산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금 우토로 51번지에는 65세대 203명의 재일조선인들이 언제 강제철거를 당할지 모를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백발이 성성한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이미 오래전에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이들을 뿌리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버린 '조국' 뿐이다. 2005년 4월 23일 우토로 주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우토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인에 대해 전후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며 '우토로 재일 조선인 마을이 앞으로도 존속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해 달라' 고 호소했다.

④ 한일 어업에 관한 협정

한일어업협정은 박정희 정권이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 어민들에게 유리한 평화선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첫째, 기존의 평화선을 무시하고 한국 어민들만이 어로할 수 있는 전관수역(한일 양국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 수역의 어업에 관하여 각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을 12

해리로 축소시켰다. 국제적으로도 12해리 전관수역 문제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한국 연해어장을 일본과 나눠 갖는 협정에 합의한 것이다.

둘째,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여 한국 연해어장이 일본과 공동소유임을 밝혔다. 일제 36년 간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노획한 한국 어장을 일본 어장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어획 실적을 인정한 것이다. 협정 체결 전에도 14년 동안 평화선을 수시로 넘나들며 불법 어로 행위를 해 온 일본의 침탈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만들어 준 셈이다.

셋째, ‘기국주의’ 실시에 합의하였다. 기국주의란 한마디로, 일본 어부들이 협정 이외의 수역에서 불법 어로작업을 하면 일본 정부가 자국법에 의하여 자국법정에서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내놓고 강도짓을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의도가 반영된 이 불평등조약에 합의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은 ‘바다를 팔아넘겼다’는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당시 원양어업이 발달해 있던 일본 어민들은 한반도 근해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던 우리 어민들은 일본 근해까지 가서 조업을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 어업협정은 우리 어민들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조약으로, 어민들은 물론 학생들과 시민의 격분을 불러 일으켰다.

4

시체여, 녀 없는 시체여!



1. 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

“시체여! 너는 오래 전에 이미 죽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다. 녀 없는 시체여! 반민족적 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 여. 네 주검의 악취는 ‘사쿠라’의 향기가 되어……. 생전에도 죄가 많아 욕만 먹던 시체여! …… 절망과 기아로부터 해방자로 자처하는 소위 혁명정부가 절망과 기아 속으로 민족을 함멸시키기에 이르도록 한 너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 종잡을 길 없는 막연한 정치이념, 끝없는 혼란과 무질서와 굴욕적인 사대근성, 방향감각과 주체의식과 지도력의 상실, 이것이 곧 너의 전부다. 시체여!”

1964년 5월 20일 오후 1시. 동숭동 서울 문리대 교정에는 때아닌 조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울대, 동국대 등 5개 대학 한일굴욕회담반대투쟁위원회의 연합조직 한일굴욕회담반대학생총연합회(학총련)가 거행하는 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이었다. 집회에 참가한 4,000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은 머리 위에 ‘축



*** 1964년 5월 20일 '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 및 성토대회'를 마친 서울 시내 5개 대학의 학생들이 관과 만장을 앞세우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_김천길

‘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이라는 만장을 드리운 채 절연한 눈빛을 쏘아 내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소름끼치도록 신랄하게 도려내 보인 이 조사는, 서울 문리대 미학과 4학년이던 김지하의 작품이었다. 김지하는 이 조사에서 박정희 정권의 모토였던 ‘민족적 민주주의’를 처음부터 시체로 규정하고 들어갔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훗날 이 조사를 읽은 충격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숨이 막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이전에도 아니 그 이후에도 이것만큼 통렬하게 5·16혁명정부를 비판한

글을 읽어 본 적이 없었다.’

조사 낭독이 끝날 즈음, 두건을 쓰고 죽장을 든 4명의 학생이 ‘민족적 민주주의’ 를 상징하는 검은 관을 메고 입장하였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와아!’ 하는 함성이 일었다. ‘검은 관’ 을 선두로 한 시위대의 물결은 교문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여 무장경찰과 충돌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했던 이날의 시위는 많은 연행자와 부상자를 낳았다. 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을 4·19혁명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친일·친미 정권으로 규정하는 데 더 이상 머뭇거리기가 없었다. 5·20시위를 기점으로 한일 회담반대투쟁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 억압, 외세 의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반정부운동으로 전환되었다.

5·20시위를 통해 공개적으로 ‘시체’ 가 돼 버린 박정희와 5·16쿠데타 세력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민족적민주주의 장례식을 주최한 학총련 간부들을 전국에 현상 수배하였다. 5·20시위로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1일 새벽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을 법원과 담당 판사 양현의 집에 보내 엄포를 놓기도 했다. 무장 군인들이 쳐들어와 “데모하는 놈들을 잡아 놓았으니 즉각 구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수류탄을 터뜨려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며 협박한 이 사건은 ‘권력이 법 위에 있음’ 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박정희 정권이 스스로 그간 줄기차게 외쳐 온 ‘민족적 민주주의’ 의 본질이 무엇인지 온 국민 앞에 자백한 셈이었다.

전 국민이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가운데 5·21법원난입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까지 끓어오르자,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최대의 위기를 맞은 셈이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위기였다. 박정희 정권에게는 이 위기상황을 돌파할 새로운 대응 방법이 필요했다. 그것은 ‘더욱 강경하고 더욱 뻔뻔스러워지기’ 였다. 한일회담반대투쟁 세력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박정희 정권의 민주주의가 그 본질을 달리하고 있는 이상, 이 둘이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5·20시위와 군인들의 5·21법원난입사건을 기점으로, 박정희 정권은 명백한 정치적 반동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민기식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법원난입사건에 대해 “군인들의 우국충정이었다. 앞으로도 데모가 계속된다면 이 같은 군인들의 집단 행동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장병들의 경거망동을 막으려면 데모가 없어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5월 23일 박정희는 광주에서 난국의 책임이 일부 야당과 언론인, 학생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있다고 비난하였다.

2. 쓰러진 학우를 들것에 메고

‘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을 치른 5월 20일 밤이었다. 장례식에서 김지하의 조사를 대신 낭독한 정치학과 3학년 송철원은,

검은 관을 앞세운 시위 행렬이 교문을 빠져나가자 조용히 학교 뒷담을 넘었다. 장충동 친구집에 숨어 들어간 그가 겨우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갑자기 낮선 청년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송철원을 검은색 지프에 태우고 남산 중턱의 외딴 건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약 2시간 동안 송철원을 발길로 차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담뱃불로 마구 지지는 등 고문을 가했다.

송철원이 괴한들에게 린치(법적절차 없이 사사로이 가하는 형벌)를 당한 것은, 정부기관의 학원사찰조직인 YTP의 내막을 폭로했기 때문이었다. YTP(Young Thought Party: 청사회)는 중앙정보부가 학원사찰을 위해 운영하던 학생 프락치 조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매월 2~3,000원씩의 정보비를 주어 운동권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게 했다. 이들은 운동권 학생들에게 온갖 위협을 가했고, 때로는 장학금과 유학을 미끼로 유혹하기도 했다. 1964년 4월, 학내에 프락치에 대한 소문이 떠들자 송철원은 학원사찰조사위원회를 만들고 YTP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학원사찰성토대회’에서 그 내막을 폭로했다.

괴한들에게 정신을 잃을 때까지 두들겨 맞고 간신히 풀려난 송철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린치사건과 YTP사건의 전모를 자료와 함께 살살이 공개했다. 기자들의 입과 펜을 통해 이 사건이 만천하에 알려지면서 박정희 군사정권의 도덕성은 심하게 훼손되었다. 박 정권은 재빨리 사태를 수습하여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려 했다. 29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사표를

제출하였고, 30일에는 송철원에게 린치를 가한 중앙정보부요원들이 자진출두 형식으로 서울지검에 나타났다. 이들은 6월 8일 직권을 남용한 ‘가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박정희는 대학생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직접 대화’를 하는 등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는 갈수록 거세어졌다. 초기에 참가하지 않았던 대학이나 아직 정치의식이 취약한 고등학생들까지 한일 회담반대투쟁 대열에 속속 가담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혐오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언론은 연일 ‘쿠데타 이후 민주세력의 최대 반격’이라며 연일 시위대의 움직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시민들의 호응도 컸다. 야당도 ‘사태 수습에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라’며 박 정권을 몰아세웠다.

5월 25일에는 전국 대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난국타개궐기대회’가 열렸다. 3일 전인 5월 22일, 서울 시내 32개 대학 연합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한일굴욕회담반대학생총연합회’가 주최한 전국 규모의 첫 집회였다. 이날 학총련 학생대표 32명은 “구속 중인 애국학생 즉시 석방”, “독점매관재벌의 엄단” 등을 요구하면서, 5월 30일까지 일주일의 냉각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4·19혁명 정신으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라고 선언, 향후 정부와의 대격돌을 예고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이 제시한 냉각기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5월 26일 정일권 총리는 관계 장관, 중앙정보부장, 검찰총장과 대책회의를 가진 직후, “학생들이 무질서하고 격한 행동을 삼가주기 바란다”면서 계엄 선포의 가능성을 던지시 내비쳤다. 26일, 내무부 장관은 “20일 이후의 데모에는 서울대의 용공적 색채가 농후한 서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소속 학생들이 주동이 되었으며 일부 정치인과 혁신계 인사들이 물심양면으로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용공(공산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그 운동에 동조하는 일)’이란 이름으로, 거세져 가는 한일회담반대투쟁에 쐐기를 박으려는 음모가 시작된 것이다.

5월 27일, 전남대생들은 “애국충정 있거든 하야로 보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다. 4·19혁명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구호가 학생시위에 등장한 것이다. 교수들도 5·16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서울대 전체교수협의회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학원의 자유 보장, 구속 학생의 석방, 학원자치에 위배되는 교육법 개정 등을 요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한일회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교수들의 입장 표명은 5월 21일의 군인들의 법원난입사건과 경찰의 학원난입 등 민주주의적 질서가 심각히 도전 받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5월 29일 서울 시내 34개 대학 대표들은 “정부는 우리의 외침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회유정책이나 매카시 수법으로 그 초

점을 흐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번의 구국비상결의 선언대로 행동할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 행동이란 1960년대 학생운동에서는 거의 최초의 시도라 할 단식투쟁이었다.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는 이미 25일경부터 일주일의 냉각기간이 지나도 합당한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단식'이라는 강력한 실행행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5월 30일, 자유쟁취궐기대회를 연 서울 문리대생들은 '박정권 하야', '공포 정치 지양'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박정희 정권의 타도 없이는 한일회담반대운동도 무의미하다'는 자신의 결론을 단호히 보여 주었다. 학생들은 모의 최루탄을 불사르는 최루탄 박살식을 가진 뒤, 오후 3시경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농성은 반대운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책으로서, 이들은 6월 3일 안으로 타 대학에서 일어나면 쓰러진 학우를 들것에 메고 가두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단식농성장은 새로운 시위문화를 선보이는 자리였다. 오늘날 노가바(노래가사 바꿔 부르기)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최루탄가', '박화분가', '잘탄다가'가 즉석에서 만들어져 농성학생들에 의해 불리어졌는데, 그 중에서 김지하가 우리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에 가사를 붙인 '최루탄가'가 가장 유명했다. 학교 정문에 학생기를 설치한 방송반은 격렬한 어조로 선동 문건을 낭독하였고, 시와 촌극, 풍물 등 매일 한두 가지씩의 이벤트를 선보이며 일반 학생들의 눈과 귀를 잡아끌었다. 머리에 흰 띠를 두른

채 검은 작업복이나 교복 차림으로 가마니 위에 누워 있는 단식 농성대의 모습은 그 자체가 엄청난 선동이요 충격이었다.

2, 30명으로 시작된 단식농성대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학생들의 주장도 날로 강도가 높아졌다. 학생들의 처절한 단식투쟁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시위를 전국적인 봉기의 양상으로 치닫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6월 1일이 되자 먼저 전북대생들과 청주대생들이 구속학생 석방과 박정희 정권의 하야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어나왔다. 6월 2일에는 서울시내 약 6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반정부성토타회를 열고 시내 곳곳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3. 불타는 6월

박정희 정권은 “학생시위에서 내걸고 있는 구호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시위 학생들을 더욱 자극했다. 그러자 서울대 문리대 교수 30여 명은 “학생들이 굶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앓아 볼 수만은 없다”, “학생들의 주장은 관철되어야 한다”며 “당국이 교수들의 사태수습 건의를 외면하면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반대운동 진영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시위 학생들의 극한투쟁과 무력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강



●●● 6·3항쟁 사진제공_김천길

정책은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의 주요 사회·정치 세력들도 한일회담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뚜렷이 갈라졌다. 학생, 지식인, 언론, 야당, 종교단체와 일반 국민들은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강행하는 박정희 정권의 반대편에 섰고, 박정희 정권과 그 후원을 받는 기득권 집단은 그 맞은편에 서게 되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세력의 전면적인 투쟁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다. 이래저래 뜨거운 6월이었다.

서울대 문리대 단식농성단의 숫자가 300명으로 불어난 6월 2일 밤. 허기에 지쳐 쓰러진 농성 학생들 앞에 돌연 수배 중이던 김중태, 김도현 등이 나타났다. 김중태는 농성 학생들에게 “우리의 학생운동을 민족혁명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매관자본의 박멸, 중간 투기업의 엄금, 산업구조의 개편이 그 내

용이다”, “민족 최후의 보루인 단식투쟁을 릴레이 식이라도 계속해 달라”며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는 역시 지명수배되었던 현승일, 김도현과 함께 경찰에 자진 출두하였다. 이들의 드라마틱한 등장과 자진출두는 정부 당국에 의해 용공으로 몰리고 있던 한일회담반대운동 세력들의 투쟁에 정당성과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다. 이는 바로 이튿날인 6월 3일 ‘박정권 하야’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로 연결되었다.

6월 3일은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이날 서울에서는 한양대, 서울대, 고대, 연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18개 대학 1만 5,000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고, 수원에서는 서울 농대생 600여 명이 도보로 경수가도를 달려 서울로 들어왔다. 서울 시내로 몰려나온 학생과 시민 약 5만여 명은 ‘무단정치 박정권은 민족을 위해 물러나라’, ‘썩고 무능한 박정권 타도’를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파도처럼 밀려갔다. 세종로의 시민회관과 유숙 건물 앞의 경찰 1차 방어선에 걸려 일단 멈춘 학생들과 시민은 약 1만여 명에 달했다. 오후 3시 10분경 시위대는 철조망 1개를 50미터 가량 끌어내고 투석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고 공수부대의 풍차까지 동원하는 등 시위대의 전진을 막으려 애썼으나, 시위대는 제2 저지선인 경기도청과 제3 저지선인 중앙청 정문 앞을 잇달아 뚫어내었다.

네 군데의 교통관제탑을 점거한 시위대는 교통 통제반을 조직하여 질서 유지에 나섰다. 몇몇 경찰서가 피습된 가운데, 군



●●● 시청 앞 광장에 모여든 수만 명의 시위대 사진제공_경향포토

용 트럭 10여 대를 탈취한 시위대는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활주했다. 도로변에 늘어선 수많은 시민들은 행진하는 시위대를 향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은 직접 시위대열에 합류하여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다. 국회의사당에서 청와대에 이르는 거리는 밀려드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로 물샐 틈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시위대에 의해 2개의 경찰서와 1개의 소방서, 7개의 파출소, 시경 순찰대 시설과 차량이 파괴되었으며, 그 중 경찰 백차, 수도경비사 트럭 등 17대가 탈취되었다. 특히 건국대 초급대학 농경과 1학년 이윤식은 탈취한 군용 트럭에 탔다가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결국 7월 2일 숨을 거두고 만다.

이날 오후 3시경, 박정희 정권은 전 각료와 야당 간부가 모인

가운데 긴급 대비책을 논의하였다.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는 봉기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고, 오후 7시경부터는 4·19혁명 당시에 그러했듯 시위의 주체가 도시의 하층 청소년들로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찰 관용차와 파출소를 파괴하였다. 7시 30분경, 제4 저지선인 조달청 앞으로 밀려든 서울의 시위대는 수경사 군인들의 강력한 저지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와대 외곽의 방위선을 돌파한 시위대가 청와대를 경비하고 있던 중무장한 공수부대를 포위함으로써 6·3시위는 절정을 이루었다. 청와대를 포위한 시위대는 “박정권은 해야하라”, “국민은 배고프다”, “민족분열 일삼는 독재정권 물러가라”, “미국은 가면을 벗고 진정한 우호국임을 보여 달라”, “데모가 난동이나, 쿠데타가 난동이나”, “몰수하자, 매관자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모두가 박정희 정권은 물론 그 물질적 기반이 된 매관자본, 쿠데타 정권을 배후에서 비호하는 미국을 날카롭게 겨냥한 구호들이었다.

“완전히 4·19혁명 전야의 분위기였죠. 대학생들도 많이 모였지만, 길바닥에서 손수레 끌고 장사하는 사람들, 구두담이 같은 하층민들, 경찰에서 말하는 양아치들 이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였죠. 그만큼 호응이 대단했다는 얘가지요”(김중태).

이날 밤 9시경, 청와대에서는 박정희와 버거 미 대사, 해밀턴 하우스 주한미군사령관의 긴급회담이 열렸다. 버거 미 대사와 하우스 사령관은 청와대를 둘러싼 시민들과 학생들을 가로지를

수 없어 미군 헬리콥터 편으로 청와대에 도착하였다. 이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미국의 박 정권에 대한 확고한 지지 표명과 함께 계엄권 발동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시위 진압에 군대를 동원할 경우 한미협정에 의거 사전에 유엔군 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 대사관 대변인에 따르면 이때 하우스는 완전무장한 한국군 2개 사단의 서울 출동을 허락했다는 것이다.

4. 계엄령과 재야세력의 등장

6월 3일 오후 9시 40분, 어두운 밤의 장막을 찢는 무거운 군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대통령공고 11호로 서울 일원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다. 서울 시내 곳곳에 모여 있던 학생과 시민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계엄령은 3일 오후 8시로 소급되어 선포되었다. 박정희는 담화문에서 계엄령 선포가 ‘참을 대로 참다가’ 마지못해 내린 ‘결단’ 이라면서 “학생 데모의 난동화는 국가 기본을 흔들고 망국의 씨를 뿌리는 철없고 한탄스러운 일”이며, “계엄기간 중 난동, 파괴, 불온한 언동, 유언비어 조작을 비롯한 범법행위와 혼란을 틈탄 일체의 공산세력은 단호히 엄단될 것” 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서울로 출동한 군 병력은 중앙청 정

문 앞에 운집해 있던 시위 군중들을 세종로 방면으로 밀어붙였고, 자정 무렵에는 시위를 완전히 진압하였다. 이날 경찰에 연행된 인원은 대학생만 630여 명에 달했다. 바주카포와 총검이 부착된 소총으로 무장한 군대는 주요 도로에 기관총을 설치하였고, 헬멧과 방독면을 쓴 채 서울 시가지를 순찰했다. 6월 4일자 조간신문들의 지면은 정부의 공식적인 포고나 발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다. 집회나 시위는 완전히 금지되었고, 야간통행이 금지되었으며, 각급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계엄군에 의해 학교가 폐쇄되자 서울의 학생들은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가 어려웠다. 6월 4일, 경희대생 200여 명이 교내에서 시위를 시도하였으나, 출동한 군인들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 서울의 시위대가 발이 묶이는 대신 부산, 대전, 광주, 목포 등지에서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자 정부는 '지방학생들이 서울에서와 같은 난동사태를 벌인다면 정부는 부득이 비상계엄을 지방에까지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시위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시위를 이끌던 학생들이 사라지자, 시위에 호응하던 시민들도 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하여 굴욕적인 한일회담반대운동에서 시작하여 박정희 정권 타도투쟁으로 이어진 1964년의 한일회담반대운동은 3·24시위 이후 72일 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계엄으로 일단 한일회담반대운동을 진압한 박정희 정권은 사태 수습을 위해 6월 5일 한일회담을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김종필을 당의장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공화당도 6월 6일 중앙정보부의 해체, 한일회담 대표의 전면 개편, 부정, 폭리 취득자에 대한 특별조치, 파괴행위방지법의 입법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물론 이것은 잠시나마 국민의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추진된 것은 학생시위를 막기 위한 파괴행위방지법뿐이었다.

김종필이 외국으로 쫓겨나고 지배권력 내부의 갈등이 마무리되자 박정희 정권은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노골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6·3시위와 같은 대규모 투쟁이 일어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를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정희 정권이 얻어 낸 교훈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그간의 유향적이고 온건한 통치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강경방침으로 돌아섰다.

박정희 정권에게는 한일회담반대투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그 파급력을 높였던 언론도 학생들 못지않게 미운 존재였다. 박정희 정권은 언론의 사전 검열을 실시하는 한편 일부 비판적인 언론인을 구속하였고, 눈엣가시 같은 동아일보에 군인들을 침투시켜 기자들을 위협했다. 7월 29일 계엄이 해제되자, 공화당은 7월 30일 ‘학원보장 입법’과 ‘언론윤리위 법안’을 단독 상정하였다. 그리고 8월 2일 밤 야당의 방관 속에 양대 법안을 전

격 통과시켰다.

박정희와 공화당의 이러한 탄압 정책은 도리어 한국의 언론 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병린, 함석헌, 장리욱, 장준하, 강원룡 등 정당, 종교계, 법조계, 학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언론자유수호 국민대회발기준비위'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까지 박정희 정권의 탄압에 꺾끗하게 맞서며 재야 민주화운동세력의 한 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6·3시위 당시 구속된 학생들에게는 '내란죄'라는 터무니없이 무거운 죄가 적용되었다.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던 어린 학생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하였다는 것은 박정희 정권이 6·3시위에서 느낀 위협과 충격이 얼마나 컸었던가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계엄이 선포된 6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352명의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고, 구속된 학생은 224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던 때라, 박정희 정권의 법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와 검사들은 구속된 학생들을 줄줄이 풀어 주었다. 석방의 행렬은 1964년 연말까지 이어져, 이명박, 김실, 박원규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12월 22일 이후, 박정희 정권이 계엄령까지 동원하여 진압했던 6·3시위는 단 한 명의 실행자도 남기지 않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과잉 반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학생운

동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서울대의 ‘불꽃회사건’, ‘인민혁명당사건’ 과 같은 조직사건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특히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변란을 꾀해 온 지하조직을 적발했다’ 며 대대적으로 발표한 인민혁명당사건은 의혹투성이의 사건이었다. 사건 연루자들은 대부분 현직 언론인, 대학교수, 학생들이었으며, 이들의 용공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정보부가 이 사건을 급조하였음을 시사해 주는 증거들이 더 많았다.

인혁당사건의 조작설과 피의자들에 대한 혹독한 고문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중앙정보부로부터 피의자와 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지검은 20일간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인혁당이란 반국가단체는 중정의 조사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며,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구” 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은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기소를 거부하는 항명파동을 겪으며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5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 청산



1. 김중배를 누가 죽였나?

6·3시위 이후 담보상태에 빠졌던 한일회담은 1965년 1월 18일 다시 재개되었다. 회담의 타결에 목을 매고 있던 박정희 정권은 ‘범투위를 재소집하겠다’는 야당의 반발도 가볍게 무시하였다. “20년 더 한국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전쟁으로 좌절되었다”는 일본 측 수석대표 다카스키의 망언도 문제 삼지 않았다. 2월 17일, 시이나 일본 외상이 한일협정의 기본조약 가조인을 위해 내한하자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열기는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한일회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9인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고려대 등 각 대학의 움직임도 부산해졌다.

가조인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고조되자, 서울시 경찰국은 2월 17일 0시를 기해 서울시 전역에 을호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비상경계령은 일본 외상이 한국에 머무는 20일 밤 12시까지 계속되었다. 2월 17일, 시이나 외상이 머무는 조선호텔 앞에 난데없

이 “평화선은 한민족의 생명선이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리면서 기습 시위가 벌어졌다. 한일협정의 기본조약이 가조인된 2월 20일 2시. 한일회담반대성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시청 앞 광장에 몰려든 수천 명의 인파는 경찰의 제지에 따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가조인투쟁은 꺼져 가던 한일회담반대운동의 불씨를 살려 냈다. 재소집된 범투위는 3월 20일 서울운동장에서 3만 청중이 참가한 가운데 성토대회를 개최하였고,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22개 도시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하였다. 28일, 윤보선은 4·19혁명의 진원지인 마산의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야 민주주의가 삽니다.”

한일회담반대투쟁의 불길은 대학가에서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3월 26일에는 동국대에서, 3월 31일에는 전남대에서 성토대회가 개최되었다. 학생들은 “삼천리 강토와 한국 민족을 일제의 잔악한 무리 앞에 내놓고, 수억 불의 돈으로 정치 흥정을 하려 드는 정부 처사를 규탄한다”고 외치며 군복을 입은 경찰에 맞서 투석전을 벌였다.

한일회담반대투쟁이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박정희 정권은 더 이상 학생운동 세력과 타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집회와 시위 기간 내내 장소 불허, 포스터 파기, 연행, 구속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

응하였다. 특히 전남대 시위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위 당일 이후에도 관련자를 끝까지 색출·구속하였고, 학교 측에도 엄벌을 요구하여 총학생회장 정동년 등 7명을 제적시켰다. 4월 1일, '학생평화선사수투쟁위원회'를 결성한 서울시내 13개 대학 학생대표 40여 명은 '한일회담 가조인 무효화', '평화선 사수' 등을 내걸고 4월 9일부터 합법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반대투쟁 세력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4월 3일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에 가조인함으로써 한일회담을 일단락 지었다. 4월 10일, 범투위가 먼저 제2차 지방유세에 나서면서 전국에서 산발적인 반대시위를 벌여졌고, 13일부터는 고대생, 경희대생, 연대생 3,000여 명이 '한일회담 가조인 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일부 시민들도 학생들의 조인반대투쟁에 호응하여 시위에 합류하였다.

대한극장 앞길에서 시위를 벌이던 동국대 농학과 3학년 김중배가 경찰 경봉에 맞아 두개골 골절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이 날이었다. 의식을 잃은 김중배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 갔으나 15일,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시위대는 크나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16일, 동국대생 2천여 명은 교내에서 김중배의 위령제를 마치고 비장한 얼굴로 애국가와 교가를 부르며 교문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친구를 잃은 슬픔과 분노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막아서는 경찰들을 향해 눈을 부릅뜬 때, 필력이던 플래카드가 먼저 물었다.

‘김중배를 누가 죽였나?’

학생시위는 마치 불을 뿜듯이 강력했다. 경기도 학생 1,000여 명은 ‘평화선 암매! 을사년은 통곡한다’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서울법대생 50여 명은 5일간의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대미의존적인 반신불수의 한국 경제를 이중예속의 첩쇄에 속박하는 것이 조국 근대화의 첩경인가” 를 묻고, ‘미국은 한일회담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 고 촉구하였다.

4월 16일, 건국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등 8천 5백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으며, 서울법대에 이어 상대생들도 농성에 돌입했다. 4월 17일에는 서울 시내 3개 고교생 3천여 명이 ‘신을사조약 반대’, ‘김중배 군의 사인 규명’, ‘매국조약 폐기’ 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하였다. 같은 날, 범투위는 4만여 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호창운동장에서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찰은 시위대의 가두진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최루탄을 마구 쏘아대며 시위대를 자극했다. 분노한 시위대는 파출소를 점거하고, 거리를 휘젓고 다녔다. 결국 1개 중대의 군대와 헬기 2대가 동원되고 나서야 시위는 겨우 진정되었다.

4·19혁명의 열기 속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화여대생들의 대규모 시위 참여는 많은 이들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훗날 김지하가 회고록에 쓴 대로 “미국인지 독일인지 한 신문에 최루탄 연기 속에서 시위하는 여대생 집단의 커다란 사진을 신

고 ‘좌익학생들’이라는 제목을 달게” 할 정도로 65년 비준반대운동에서 이대생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1965년 초에 당시 이대 총학생회장 진민자와 법대학생회장 신춘자(신인령)를 만났어요. 젊은 처녀들 정신대 가라고 선동이 나 하고 황국신민 만세나 부르던 전 이대 총장 김활란, 모운숙 같은 여성이 되고 싶냐, 이대도 데모에 참여해야 된다고 열렬히 주장했죠” (김중태).

“이대 같은 경우 현실 문제에 감감무소식이었는데 6·3사태 때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해서 비준반대운동 때는 진민자, 신춘자의 맹활약으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지요” (김정남).

궁지에 몰린 박정희 정권은 각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효창운동장 집회를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였다. 14일에는 서울 시내에 군병력을 투입하여 무력시위를 벌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회담반대시위가 심해져 경찰력으로 막기 어려울 경우, 요청이 있으면 위수령에 의거 수도경비사령부 병력 이외의 군병력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정권이 시위 진압에 군을 동원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였다.

한일회담반대운동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5월에도 광주와 목포에서 일부 고교생들의 시위가 있었을 뿐 주목할 만한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6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있을 한일협정 조인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대학가에는 다시



*** 협정안에 사인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제공_경향포토

긴장감이 감돌았다. 6월 12일, 제일 먼저 서울 법대생 2백여 명이 ‘한일회담 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자, 18일에는 서울 상대생들과 고대생들도 시위에 나섰다. 19일에는 서울대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모임을 갖고 6일째 단식농성 중인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대에서 시작된 단식농성은 문리대, 상대, 사대 학생들까지 가세하여 19일 현재 총 인원 600명을 훌쩍 넘어선 상태였다.

정조인을 하루 앞둔 21일에는 서울시내 12개 대학과 대광, 숭실, 양정 등 3개 고교생을 포함한 1만여 명이 매국외교 반대 시위를 전개하였다. 조인 당일인 22일에는 조기방학과 휴교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조인반대시위가 전개되

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21일 5시를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 경계령을 내렸던 경찰은 민원업무담당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병력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가두 진출을 봉쇄하였다.

마침내 6월 22일 오후 5시. 동경의 일본 수상 관저에서 일본 외상 시이나와 한국 측 수석전권대표 이동원이 기본합의서 및 부속문서 등에 서명함으로써 14년을 끌어온 한일협정은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였다.

2. 비준반대투쟁, 그리고 위수령

박정희 정권은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직면했다. 23일 성균관대, 서강대, 가톨릭 의대생들이 성토대회를 갖는 등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적인 조인반대시위가 전개되었다. 경찰의 초강경 진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가두시위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학생들의 시위는 주로 교내 성토대회나 단식농성으로 전개되었다.

3·24시위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오랜 투쟁은 국회비준이라는 마지막 절차를 남겨 놓고 마침내 사회 각계각층의 마음을 움직였다.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분노한 이화여대 교수들은 6월 26일 ‘젊은이들의 불타는 순수한 애국지성을 짓밟지 말

라’고 강력히 항의하였고, 대한교련도 ‘경찰이 시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학원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있다’며 반발하였다.

종교계와 예술계도 나섰다. 강원룡 등 개신교 목사 100여 명은 영락교회에서 한일회담비준반대성도대회를 열고, ‘국민의 애국적인 의사표시를 권력으로 내리누르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하였다. 7월 9일에는 예술원장을 비롯한 문인 82명이 입을 모아 한일 조약을 파기하라고 외쳤다. 7월 12일 서울시내 대학 교수 354명은 ‘한일회담의 기본조약이 일본제국주의를 합법화시키고, 우리의 주권을 약화시키며, 불평등 협정과 국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7월 13일에는 그간 학생운동권의 반대투쟁과 거리를 두어 왔던 서울시내 6개 대학 학생회장단이 공동투쟁을 다짐하는 등 비준반대운동은 정치, 종교, 문학, 예술, 교육 등 우리 사회 각 분야로 점점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7월 14일 김홍일, 김재춘, 송요찬, 최경록 등 예비역 장성 11명의 회담반대 성명은 반대운동 진영에 큰 힘이 되었다. 대부분 과거 군정과 박정희 정권하에서 최고위원이나 장관을 역임하며 박정희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의 성명 발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얼마 후, 이 예비역 장성들을 포함한 학계, 종교계, 문화계, 경제계 대표 38명은 비준저지를 위한 연합전선 구축에 합의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7월 31일 서울 대성빌딩에서 각계 인사

250여 명이 결성한 조국수호국민협의회였다. 조국수호국민협의회라는 새로운 투쟁조직이 탄생한 것은 그간 반대운동의 중심체였던 범투위가 야당의 갈등에 휘말려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데도 큰 원인이 있었다. 윤보선의 민정당과 박순천의 민주당이 효율적인 대여 투쟁을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6월 14일, 두 야당은 통합 민중당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김지히는 회고록에서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한일조약비준반대운동은 거대한 전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학생 층의 김중태 형과 정당 쪽의 윤보선 대통령 간의 연대가 그 중심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힘이 가세했다. 하나는 장준하·백기완 씨 그룹이요, 다른 하나는 고려대의 박상원, 이화여대의 진민자 그룹이었다. 전국 각 대학에 학단방위군을 조직하여 장기적으로 학교를 근거지와 해방구로 해서 다방면으로 저항해 나가며 나아가서는 조약을 비준하는 비준국회를 마비시킨다는 계획도 썼다.”

그러나 7월 20일 박정희와 영수회담을 가진 박순천이 “52회 임시국회에서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을 다룬다.”는 내용을 포함한 5개항의 시국수습안에 합의함으로써 통합 민중당은 다시 분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윤보선계가 탈당한 뒤 박순천의 민중당과 결별하면서 반대운동진영에서 범투위의 응집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 기회를 놓칠 박정희 정권이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은 7월 14일, 월남파병동의안과 한일협정 비준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보고, 발의시켰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8월 16일 박순천을 중심으로 한 민중당 온건파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단독으로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행, 통과시켰다. 한일협정안이 정식으로 조인된 지 53일, 국회에 제출된 지 33일, 실질적인 심의기간 9일 만에 이루어진 졸작이었다.

여름방학이 끝나자 학생들은 곧 비준무효화투쟁에 들어갔다. 8월 21일 서울법대생 300여 명은 공화당 일당 국회의 비준안 강행 처리는 민주 헌정의 근본이념을 뒤흔든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비준무효화투쟁은 일부 지방대학과 고교생들까지 가세한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8월 23일과 24일, 1만여 명의 성난 물결은 '한일회담 비준무효', '일당 국회 해산 및 총선 실시' 등을 요구하며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이에, 내무부는 범투위와 조국수호국민협의회 등 8개 단체를 미등록 불법단체로 몰아갔고, 정일권 내각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휴교, 군대 동원 등의 조치를 검토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또다시 군을 동원할 것이라는 징후는 여러 군데에서 관찰되었다. 무장한 군인들이 불쑥 시위 장소에 나타나서 학생들을 놀라게 했던 23일, 느닷없이 고려대에 난입한 군인들이 수십 명의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해 갔던 25일 새벽……. 국민들은 한 순간도 군대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박정희 정권의 무능에 혀를 찼다. 그리고 마침내 25일 오후, 라디오에서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데모 만능의 풍토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튿날인 8월 26일 예상대로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성대, 이대, 고대 등 몇 개 대학의 학생들은 즉각 박정희의 특별담화를 성토했는 집회를 열었지만 위수령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숨을 돌릴 여유도 없이 전국의 대학가에 피비린내 나는 검거의 바람이 몰아닥쳤다. 각 대학의 시위주동자, 배후조종자에 대한 일제 검거령이 내려지고, 고대와 연대에 휴교령이 떨어졌다. 1964년 3·24시위 이후 두 해에 걸쳐 면면히 이어져 온 한일회담반대운동은 계엄령과 위수령의 군홃발에 의해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글을 맺으며

박정희 정권은 일본의 자금 확보라는 실리에 급급한 나머지 한일 관계 정상화의 절대적인 조건이어야 할 일제 식민지 피해 청산 문제를 단순한 채무변제 성격의 ‘청구권’으로 변질시켰다. 그리고 과거 청산이라는 우리 민족의 절체절명의 과제를 외면하고 전범국 일본에 면죄부를 안겨 주었다. 가해자 일본을 경제 원조를 해 주는 ‘시혜자’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근대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족 전체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킨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치논리로 희생시킨 한일회담의 미해결 과제들은 지금도 ‘한일 과거사’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에서부터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조항 논란, 문화재 반환, 재일교포 법적 지위, 독도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 너머 산이다. 결국, 박정희 정권이 ‘구국의 일대용단’이라며 자화자찬한 한일협정은 미완의 협정이었으며, 민족의 염원을 배신한 ‘그들만의’ 협정이었다.

일본은 여전히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전쟁 책임과 반성을 회피한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죄와 배상 요구에는 여전히 인색하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진정한 화해와 공통의 역사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1964년부터 1965년까지 2년에 걸쳐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으며 전개된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4·19혁명이 변혁운동의 출발점이요, 5·16군사쿠데타가 30년 군부 통치의 출발점이라 할 때, 한일회담반대운동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최초의 대중적인 저항

운동이었다. 한일회담반대운동은 5·16군사정권이 초기에 내 걸었던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화려한 치장을 벗겨내고 군사 독재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특히, 맨주먹으로 군부정권의 무력에 대항했던 당시 학생들의 순수한 모습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다. 군인들이 총부리를 앞세워 정권을 빼앗는 상황에서 변변히 나서 보지 못하고 관망 하던 지식인들과 정치가, 사회운동 세력은 학생들의 선도적인 투쟁을 계기로 서서히 투쟁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소박한 반일감정이나 굴욕외교 반대 차원에서 한일회담반대운동에 호응했던 국민들도, 한일회담반대운동 세력을 군화 발로 무참히 짓밟고 기어이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정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군사정권의 본모습을 똑똑히 깨달을 수 있었다.

좌절한 운동에서도 교훈은 있기 마련이다. 계엄령과 위수령 발동 등 군사정권의 무력으로 한일회담반대운동은 좌절되었지만, 이 투쟁의 경험 속에서 운동세력은 군사정권의 본질을 뼈저리게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다시 1970년대 유신독재의 무자비한 탄압을 뚫고 반군사독재투쟁을 꽃피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박정희 시대를 다시 보자는 주장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경제발전을 이룩한 공은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일본에게 받아 낸 ‘경제

협력' 자금이 그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한 종자돈이었으니 한일 회담도 그만하면 실리를 거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 1월 17일 외교부가 공개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한일회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총 103만 2,684명에 대해 총 3억 6,4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으면서도, 정치적 타결로 협상을 마무리한 뒤에는 일본 측이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일괄 배상을 받겠다며 개인 청구권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 간의 협약이나 조약으로 봉쇄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그 자체의 의미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한 한일조약의 진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공개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를 근거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제약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한일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일본에게 받은 무상 3억 달러로 사들인 원자재 등을 팔아 조성한 1,077억 원의 9.7%에 불과하다. 박정희 정권은 일본에게 받은 자금의 대부분을 경제개발에 썼다. 박정희 시대가 이룩한 '경제발전의 기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어떤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 우리 정부가 일제하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1965년 한일협정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박남수 시인이 발표한 시 「우리는 또다시 노예일 수 없다」를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친다. ‘배상’을 받아도 거래의 울분을 씻을 수 없건만 ‘원조’로 선조의 무덤에 집을 지으려 한다는 시인의 마지막 일 같은, 한일 과거사의 진정한 청산을 바랐던 당시 국민 모두의 마음이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또다시 노예일 수 없다 II〉

국민의 가슴을 뚫고 탄생하는
테모대의 깃발에 새겨지는 목소리는
최루탄으로도 몽둥이로도 꺾지 못한다.

가슴에 사무친 분노가 굳어 영건
저 피의 글발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일렁이는 피의 바다에 외롭게 뜬 고도다.

거센 파도가 메아리치는
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역사의 소리를 들으라

국민의 폐부에서 솟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장까지 제끼고 들여다보라
거기에 돌처럼 굳은
저것이 무엇인가를 만져 보라.

20년으로는 삭지 않는 돌처럼 굳은 국민의 넋을
어떻게 선뜻 버릴 수 있겠는가
당신의 선조의 뺨에 날라붙은 왜경의 손바닥이
삼각산의 바윗돌도 깨고 울렸던 것이다.

그것은 긴 세월이 아니다
결코 잊을 수 있는 세월이 아니다
'원조'로 선조의 무덤에 집을 짓겠는가
'배상'을 받아도 씻을 수 없는 겨레의 가슴을
보아서 입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일렁이는 피의 바다에
외롭게
뜯
고도다.

—박남수